

월간

# 나라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2020. July

Vol. 43

7



## 재정 INSIGHT

KPFIS 인사이트  
재정칼럼  
툰아보기

## 재정 NOW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키워드 재정  
해외재정동향

## 재정 STORY

이달의 재정 이야기  
재정 Talk Talk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재정 캘린더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 Contents



##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July. 2020  
VOL. 43

## 월간 나라재정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273-05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http://www.kpfis.or.kr)  
발행인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분석본부 | 02-6908-8593  
제작 경성문화사 | 02-786-2999

## 재정 INSIGHT

### 04 • KPFIS 인사이드

-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  
정성호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위원
- “K-방역 우수사례에 ‘재정정보시스템 운영’도  
추가합니다!”  
황순구 재정정보분석본부 본부장  
이기영 dBrain운영본부 과장

### 26 • 재정칼럼

- 그린 뉴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 극복의 대안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그린 뉴딜의 재원조달 방향  
이동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34 • 톨아보기

- ‘새로운 100년으로의 대전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담긴 한국판 뉴딜 주요 사업



## 재정 NOW

- 40** •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 46** •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 52** • 키워드 재정  
남북관계
- 56** • 해외재정동향  
OECD 주요 재정·경제전망  
「OECD Economic Outlook」



## 재정 STORY

- 60** • 이달의 재정 이야기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
- 64** • 재정 Talk Talk  
추가경정예산은 언제 편성하나요?
- 66** •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제임스 휘슬러와 어머니의 교육열
- 70** • 경제철학 이야기  
부르주아 자본론의 개척자, 뵘바베르크
- 74** • KPFIS의 서재
- 76** • 재정 캘린더
- 78**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

무려 3차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재정준칙 제정 여부와 그 방향성에 관한 논의가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주요 경제권 가운데 재정준칙이 가장 잘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rope Union, 이하 EU)의 관련 제도·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마냥 어려울것만 같은 재정준칙에 대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정성호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위원(jazzsh@kpfis.or.kr)

## 1 ————— 유럽 재정준칙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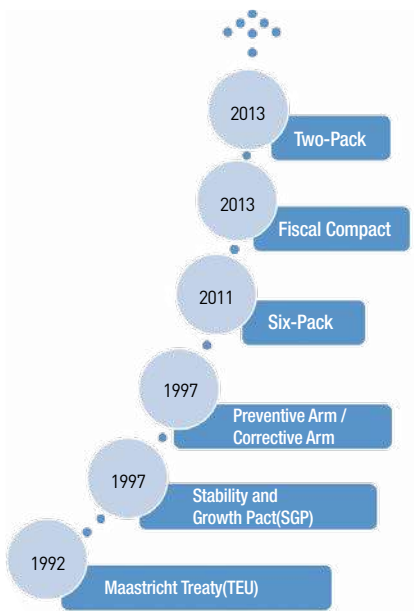
유럽연합(EU)은 집권적(공동의) 통화정책과 분권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개별 회원국의 재정정책이 타 회원국의 통화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2010년 재정위기를 계기로 유럽연합은 신뢰할 만한 재정위기 대응 메커니즘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유럽연합의 지속가능성마저도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더욱 커졌다. 강한 경제·금융 공동체와 물가안정 지향적 통화정책이 유럽연합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한 셈이다.

재정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이하 SGP)’은 위기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재정당국 없이 공동의 재정정책 프레임으로 회원국의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초과적자시정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 이하 EDP) 또한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정책기제들이 회원국의 재정건전화 노력에 대한 협력적 유인이 크지 않고, 상호지원 메커니즘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재정준칙은 경기안정화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 있어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다. 2005년 유럽연합은 SGP에 중기재정목표(Medium-Term Budgetary Objective, 이하 MTO), 구조적 재정수지 개선 등을 보완하여 개정하였다(2011년, 한 차례 더 개정). EDP에는 심각한 경기침체 시 절차를 유예할 수 있게 보완하였다. 유럽 연합은 Six-Pack, Fiscal Compact, Two-Pack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통해 경기 대응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 ————— 재정준칙 관련 제도(정책)의 변천

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발효되면서 유럽연합이 출범했다<sup>1</sup>. 유럽연합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거하여 ‘공동시장’을 넘어 ‘완전한 경제통합’(예, 단일 통화)을 목표로 했다. 이 연합은 유럽공동체에서 더 나아가 내정과 사법 권한, 외교 및 안보 권한을 회원국들로부터 위임받았다. 특히, 유럽연합은 단일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대응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TFEU)’을 비준한다. 이 조약은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SGP)’을 골자로 하며 예방적 수단(부채 60%, 적자 3% 기준)과 교정적 수단인 초과적자시정절차(EDP)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해 SGP의 추가 개혁인 Six-Pack은 지출 기준의 도입, 적자 위반 시 강제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적자 위반 시 GDP의 0.2%를 무이자로 예치(1단계: 권고

<sup>1</sup> 실제 유럽연합통합의 모멘텀은 ‘델로스위원회’이다. 자크 델로스의 이름을 따서 붙인 명칭이다.



와 관리, 2단계: 0.2% 무이자 예치, 3단계: 예치금을 벌금으로 납부, 4단계: 추가 벌금 부과)해야 한다. Fiscal Compact(국가별 구조적 균형준칙)는 조약(Title III) 내 재정 Chapter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회원국은 GDP 대비 적자 3%, GDP 대비 부채 60% 이내로 유지한다는 조항을 국가 법률로 구체화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Two-Pack(Six-Pack의 강화)은 감시와 협력 강화를 목표로 회원국 공통의 예산시간표 및 준칙을 도입하여 회원국 간 예산 협력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유럽연합은 경기 대응 및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 ◎ 마스트리히트 조약

##### (1992, Maastricht Treaty on European Union: TEU)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1992년 2월 7일 서명하고, 1993년 11월 1일에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정책 목표로 한다. 이를테면 채무준칙(Debt Rule)이라고 할 수 있으며, GDP 대비 부채 비율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이하 EMU)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비준되었다. 이 조약은 저(낮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공공채무와 지출 통제를 근간으로 한다. 회원국은 이에 기초하여 GDP 대비 적자가 3%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GDP 대비 부채는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2005년 3월, 유럽연합이사회는 프랑스와 독일의 요청에 따라 조약 이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SGP를 개정하였다. 기존의 GDP 대비 적자 3%, GDP 대비 부채 60% 기준은 유지하되, 회원국을 초과적자 국가로 결정할 경우 부채 수준, 저성장의 지속 시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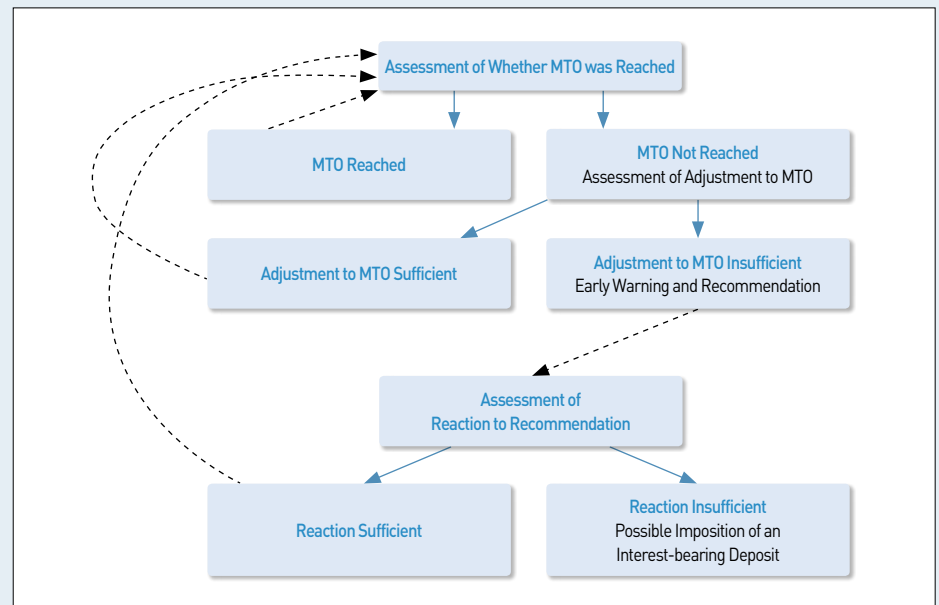
#### ◎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1997, Stability and Growth Pact: SGP)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메커니즘은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목표 설정에 기초한 방식이다. 따라서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재정목표(규율)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자발적 목표를 준수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초과적자시정절차(EDP)'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SGP)'이다. 1997년 유럽연합이사회는 독일의 주도하에 유로 지역의 경제통화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SGP를 결의하였다. SGP는 독일이 주도하였는데, 1950년대 이후 독일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보인 것이 저 인플레이션 정책의 효과라 판단하였고, 유로로의 화폐 통합 이후 각 회원국의 인플레이션 정책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97년 유럽의회는 SGP에 관한 결의 과정에서 경제통화동맹의 3단계



(예산규정 보호)의 중요성을 상기시켰고, 회원국·집행위원회·이사회가 각각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는 데 이르렀다. 회원국은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 유지에 관한 안정화 및 융합 프로그램을 매년 제출하고,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평가하며, 이사회는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중기재정목표(MTO)를 달성하지 못하는 회원국의 경우 GDP의 0.2~0.5% 금액을 EU에 예치하도록 규정하였고, 회원국의 재정적자가 GDP 대비 3%가 넘거나 부채가 GDP 대비 60%를 초과하면 EDP를 진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림 1. Simplified Sketch of Steps in the Preventive Arm of the SGP



자료: Prammer, D. and Reiss, L. (2016). p.38.

### ◎ 예산 감시 및 경제정책의 감시·조정 강화를 위한 이사회 규칙

#### (1997, EC 1466/97): Preventive Arm(장기 지속가능성 유지)

이 규칙은 다자 간 감시의 일환으로 안정화·융합 프로그램, 심사·모니터링(감시 및 조정)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회원국(일반정부<sup>2</sup> 단위)이 과도한 적자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고, 이사회의 감시 및 조정을 강화하였다. 이 규칙에 기초하여 도입된 Preventive Arm(즉, 예방적 수단)이란 MTO 기준을 초과한 경우 조기경보체계가 작동되고 추가적 제재 조치(예치금 예치 등)를 취하도록 한 것이다.

EU는 Preventive Arm의 제약 아래 재정조정 기준(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 세부 기제로는 실질 경제성장률, Output Gap(실제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차이), 부채 기준(60% 이상과 그 이하로 구분)과 경기 상황(예외적 심각한 상황, ...,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황, 정상 상황)을 교차 구분하고 있다. 회원국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조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림 2. Preventive Arm 제약하에서의 연간 재정조정 기준

|                            | Real GDP<br>growth in % | Output gap(OG)<br>in % | Debt ratio<br><60% AND<br>low/ medium<br>sustainability<br>risks | Debt ratio<br>>60% OR high<br>sustainability<br>risks |
|----------------------------|-------------------------|------------------------|------------------------------------------------------------------|-------------------------------------------------------|
| Exceptionally bad times    | real growth<0 or OG<-4  |                        | no adjustment                                                    |                                                       |
| Very bad times             | >0                      | -4<=OG<-3              | 0                                                                | 0.25                                                  |
| Bad times                  | >0, <potential          | -3<=OG<-1.5            | 0                                                                | 0.25                                                  |
|                            | >0, >potential          |                        | 0.25                                                             | 0.50                                                  |
| Neither good nor bad times | >0                      | -1.5<=OG<1.5           | 0.50                                                             | 0.60                                                  |
| Good times                 | >0, <potential          | OG>=1.5                | 0.60                                                             | 0.75                                                  |
|                            | >0, >potential          |                        | 0.75                                                             | 1.00                                                  |

자료: Prammer, D. and Reiss, L. (2016). p.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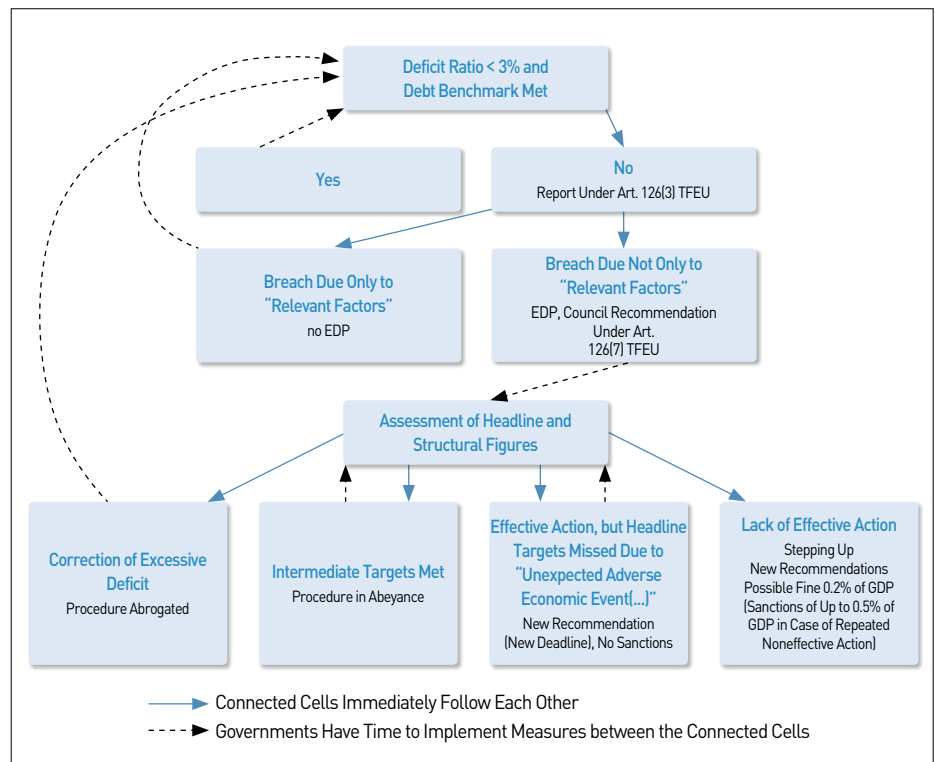
<sup>2</sup> 일반정부라 함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교육재정), 사회보장기금 등을 포괄한 개념이다(IMF, 2014).

### ◎ 초과적자시정절차의 실행 속도를 높이고 명료화를 위한 이사회 규칙

#### (1997, EC 1467/97): Corrective Arm

이 규칙은 초과적자시정절차(EDP)의 실행 속도를 높이고, 이를 더욱 구체화·명료화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Corrective Arm(즉, 교정적 수단)은 적자(3%)와 부채(60%) 기준을 초과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TFEU) 126(3)에 기초한 보고서 작성, EDP 개시, 초과적자 시정 시 절차 폐지, 중간 목표 달성 시 절차 유보, 실질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상황 발생 시 새로운 권고, 실질적 조치 미흡 시 제재 조치(무이자 예치금 예치 등) 등이다.

그림 3. Simplified Sketch of Steps in the Corrective Arm of the SGP(Euro Area Countries Only)



자료: Prammer, D. and Reiss, L. (2016). p.39.

### 【 초과적자시정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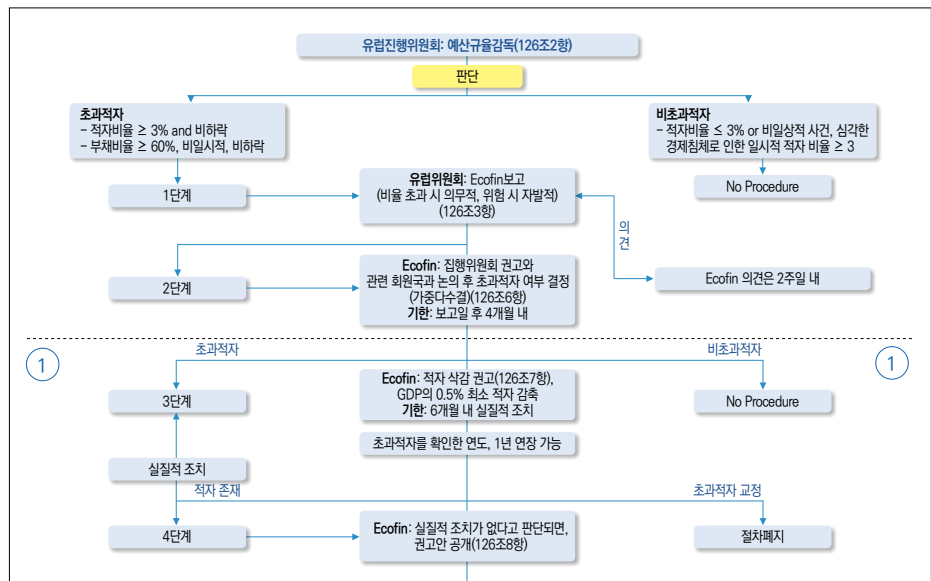
EDP는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 126조 2항에 기초하고 있다. EDP는 유럽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규율감독체제로, 총 7단계의 절차로 구분된다. 특히, 회원국이 재정 적자를 초과한 경우와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유럽집행위원회, 경제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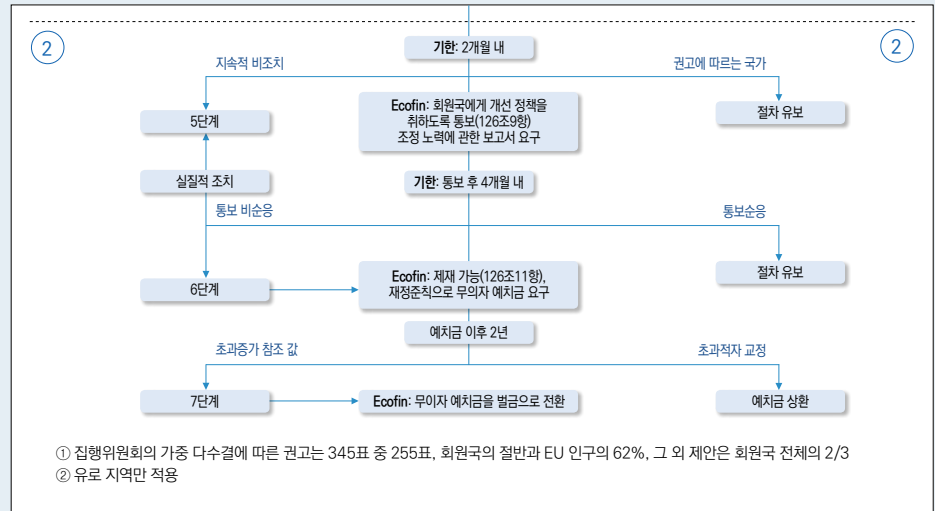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 이하 Ecofin), 이사회, 회원국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 EDP(초과적자시정절차) 단계별 조치 사항

- 회원국이 기준치(적자 3%, 부채 60%)를 초과하였다고 판단되면 유럽집행위원회가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경제금융위원회(Ecofin)는 2주 내 의견 제시(조약 126(3))
- 유럽집행위원회는 Ecofin의 의견에 기초하여 초과적자로 판단, 이사회에 권고안 제출
- 이사회는 유럽집행위원회의 의견에 기초하여 4개월 내에 해당 회원국을 제외한 회원국들의 투표, 가중 다수결 (255/345표, 회원국의 절반 또는 EU 인구의 62%, 그 외 회원국의 2/3)로 초과적자 여부 결정(조약 126(6))
- 초과적자로 결정되면 회원국에 권고안 전달(적자 삭감 권고, 최소 GDP 대비 0.5% 감축), 실질적 조치가 6개월 내 추진되어야 함(조약 126(7))
-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 이사회는 권고안 공개, 해당 회원국에 2개월 내 적자 감축 조치 통지, 통지 후 2개월 내 회원국이 통지 내용에 불순응할 경우 Ecofin은 제재 결정(조약 126(8))
- Ecofin의 권고 또는 통지에 순응하여 조치를 취할 경우 EDP는 유보되고, Ecofin은 해당 회원국에 정한 스케줄에 따라 보고서 제출 요청(조약 126(9))
- 해당 회원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그 정도가 불충분한 경우 또는 권고안에 명시한 기한 내 초과적자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무이자 예치금의 제재 가능(조약 126(11))
- 해당 회원국의 적자 수준에 따라 매년 추가적인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한도는 GDP의 0.5% 이내
- 해당 회원국이 예치금 예치 후 2년이 지난 시점에도 초과적자가 시정되지 않은 경우, 무이자 예치금을 벌금으로 전환, 벌금과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초과적자가 발생하지 않은 회원국의 GNP 비율에 따라 배분

그림 4.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 126조에 따른 EDP





자료: Peter Bofinger and Stefan Ried. (2010). Chart 1.

### © Six-Pack(2011, EU 1173/2011)

2011년 발효된 Six-Pack은 SGP의 개선안으로 기존 EDP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회원국 재정에 대해 위원회의 강화된 감시체계를 작동시킨다. 회원국의 재정, 세제, 예산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6개 EU 법령의 총칭으로 명명하고 있는 Six-Pack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SGP의 예방적 수단이 효과적이지 못해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반성에 기초하여 유럽연합이사회는 EDP 전이라도 금융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회원국이 MTO로부터 심각하게 이탈한 경우를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한 해 또는 2년 연속 GDP의 0.5% 이상 벗어난 것으로 규정한다.

재정적자 위반에 대한 강제적 수단으로 회원국의 재정적자가 3%를 초과하는 경우, 회원국은 해당 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MTO를 설정해야 한다. 부채가 GDP 대비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회원국은 유럽연합과 합의된 계획에 근거하여 부채 수준의 감경 조치를 취해야 한다(매년 초과되는 부채액의 1/20 감축). 재정적자 및 부채가 상한을 초과하는 데도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화된 제재 조치가 가해진다.

아울러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 채무가 감소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독자적으로 EDP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원국의 MTO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정부지출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즉, MTO를 달성한 경우 잠재 성장률의 범위 내에서 지출증가율을 유지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 MTO 이행을 위한 조정경로 범위 이내로 지출증가율을 낮추어야 한다. 한편, 회원국의 채무 수준과 재정수

지에 문제가 없더라도 조기경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상수지, 주택가격, 가계부채, 실업률 등 10개의 거시경제 지표를 모니터링하는 등 감시 권한을 강화하였다.

제재와 관련해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집행위원회는 MTO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이사회의 조정 권고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사회를 통해 회원국이 전년도 GDP의 0.2%에 해당하는 벌금을 예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러한 권고는 이사회가 2/3의 다수결로 반대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실제로는 제재금을 직접 부과하는 방식 대신 유럽연합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서 제재금만큼 배정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부정확한 재정통계에 대한 제재도 추가되었는데, 고의적 또는 중대한 오류에 의해 잘못된 통계수치를 보고하는 경우 단순 과반수 표결에 의해 GDP의 0.2%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그리스가 재정위기 발생 이전에 보고한 재정통계가 매우 부정확하였다는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 ◎ 신재정 협약(New Fiscal Compact, 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신재정 협약은 2013년 1월에 영국, 체코,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회원국의 서명으로 체결되었다. 이에 따르면 회원국은 국가 법률로 균형재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여기에서 균형재정은 GDP 대비 3% 이내 적자를 지칭하지만, 구조적 재정수지의 경우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보다 낮을 경우 GDP의 1% 이내의 적자, 60%보다 높을 경우 0.5% 이내의 적자를 의미한다. 회원국은 MTO를 포함한 재정규율을 국내법으로 규정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부채 증가를 용인해야 할 경우 사전에 유럽연합과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협약에 따른 회원국은 법률 이상의 형식으로 국내 법률에 반영해야 하고, 새로운 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가입국들이 불이행할 경우 유럽사법재판소가 수차례 개선통보를 한 후 중구적으로 GDP의 0.1%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원국은 과거 3년간 평균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기준점은 감축 실적에 따라 계속변화)를 초과하였다면 향후 3년간 60% 초과분 중 최소 1/20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에 EDP를 개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물론 연금개혁이나 금융안정을 위한 공적자금의 지출, EU 전역이 경기침체라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COVID-19 관련 지출은 예외로 결정). 부채 감축은 Six-Pack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이미 EDP 과정 중에 있는 23개국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허용하였다. 동 유예기간 중에는 2005년 '안정과 성장협약' 개정 내용에 따라 GDP의 60%를 초과한 채무분에 대해 '만족스러운 속도'로 감축하면 된다.

### ◎ Two-Pack(2013, EU 472와 473/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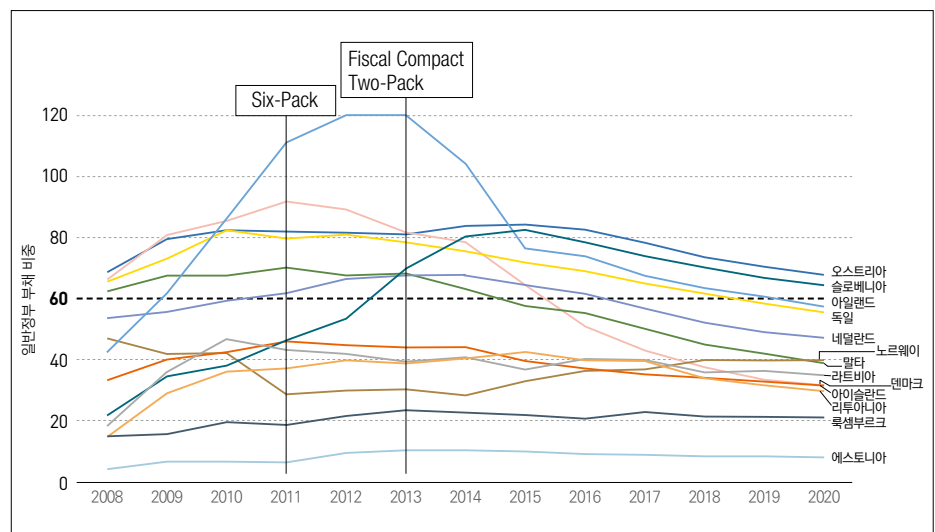
2013년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채택된 Two-Pack은 Six-Pack과 유사하며 회원국의 예산계획 초안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있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두 가지 내용을 총칭하여 명명한다. EU 회원국은 대부분 경제 규모가 비슷하다고 할지 모르나, 경기순환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정위기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제한될 수 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Two-Pack이다. 이 규칙은 EU 회원국의 초과재정적자를 해결하고, 예산계획의 초안을 감시·평가하기 위한 통칙으로서 규정되었다. 특히, EU의 경제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화폐인 유로화를 사용하는 회원국들은 예산계획 초안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평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회원국에 대한 예산계획안 평가 등을 통해 회원국 예산안 감시 및 평가를 강화하고, 회원국이 초과적자 상태를 시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함축하면, 금융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타 회원국으로의 파급 효과가 우려되는 경우 회원국의 경제·재정 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 3. EU 재정준칙의 실효성: 회원국의 부채 감축 효과

유럽연합의 재정준칙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SGP의 실효성은 부채 추이 분석으로 제한적 유추가 가능하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EU 대부분의 국가부채 규모는 60% 수

그림 5. EU 국가의 부채 추이

(단위: GDP 대비 비중)



자료: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19)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준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SGP가 작동하여 부채 규모를 줄였는지 일반화하기는 제한적이지만 부채 규모는 개선되었다. SGP(Preventive Arm, Corrective Arm)의 실효성과 2011년과 2013년의 조치가 유효하였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위 그림 5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2020년 기준 GDP 대비 부채 비율 60%를 초과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 4 \_\_\_\_\_ 유럽 재정준칙이 주는 함의

첫째, SGP(Preventive Arm과 Corrective Arm의 통합 및 절차 단순화), Fiscal Compact, Six-Pack과 Two-Pack의 조화를 들 수 있다. 회원국은 다양한 준칙(수입, 지출준칙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EU 재정준칙은 채무준칙과 수지준칙을 근간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어떤 형태이든 간에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적어도 수지준칙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재정준칙을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과거 재정건전화법(안)과 같이 예외조항을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최근 확장적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쟁은 그리 유의미하지 않다. 즉, 코로나의 대유행으로 인한 재정지출에 관한 한 재정건전성 논쟁은 멈춰야 한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정지출에 대해 준칙을 적용하지 않고 예외적 상황으로 결정한 바 있다.

둘째, 유럽연합은 중기재정목표(MTO)를 재정 운영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즉, 중기재정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하지 못한 경우 SGP 요건에 맞춘 재정지표 개선은 필수적이다(GDP의 0.5% 구조적 재정수지 개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재정수지준칙을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경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기적 관점에서 수지 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Preventive Arm 제약 하의 재정조정 가이드라인 참고)<sup>3</sup>. 이와 함께 중장기 관점에서 중기채무전략(Median-Term Debt Strategy, 이하 MTDS)<sup>4</sup>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로 지역 회원국이 제출한 차년도 예산계획안 평가 및 SGP 요건을 준수하였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EU와 같은 초국가적 규율주체 없이 재정규율을 스스로 관리 가능한 독립재정위원회(Fiscal Council)를 설치하여 재정당국과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예산과 채무 간 관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넷째, EU는 회원국의 재정 투명성·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준칙의 유연성 및 융통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재정준칙의 획일적 적용보다 합의에 기초하여 회원국별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준칙 및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면 유연성을 고려해야 한다.

<sup>3</sup> 이를 구조적 재정수지준칙이라 부른다.

<sup>4</sup> MTDS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부문 부채통계(Public Sector Debt Statistics)에서 볼 수 있다.

## 참고 문헌

- Council Regulation (EC). (1997). No 1466/97 of 7 July 1997 on the strengthening of the surveillance of budgetary positions and the surveillance and coordination of economic policies.
- Council Regulation (EC). (1997). No 1467/97 of 7 July 1997 on speeding up and clarify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excessive deficit procedure.
- Regulation (EU). (2011). No 1173/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November 2011 on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budgetary surveillance in the euro area.
- Regulation (EU). (2013). No 472/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May 2013 on the strengthening of economic and budgetary surveillance of Member States in the euro area experiencing or threatened with serious difficulties with respect to their financial stability.
- Regulation (EU). (2013). No 473/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May 2013 on common provisions for monitoring and assessing draft budgetary plans and ensuring the correction of excessive deficit of the Member States in the euro area.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3). 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ilers and Users.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4).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4.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9).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접속일: 2020.4.1.)
- Prammer, D. and Reiss, L. (2016). 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since 2011: More complex-But also stricter and less procyclical. Monetary Policy and the Economy Q. 1.
- Eyraud, L., X. Debrun, A. Hodge, V. Lledó and C. Pattillo. (2018). Second-Generation Fiscal Rules: Balancing Simplicity, Flexibility, and Enforceability. IMF Staff Discussion Note 18/04.

# K-재정정보시스템 운영

02  
KPFIS-인사이드

## “K-방역 우수사례에 ‘재정정보시스템 운영’도 추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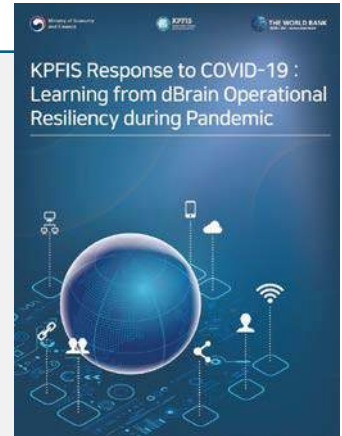
- 한국재정정보원, 세계은행·미주개발은행 요청으로  
‘코로나 상황 속 재정정보시스템 운영경험’ 알리는 국제 온라인세미나 개최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BCP(업무연속성)에는 해킹·장애 대응 이외에  
‘운영인력 보호’·‘사용자 비대면 지원’ 등 포괄해야

황순구 재정정보분석본부 본부장(rock510@kpfis.or.kr)

이기영 dBrain운영본부 과장(berkamp@kpfis.or.kr)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대공황 이래 최대 규모의 위기’라는 진단만 있을 뿐, 바닥에 근접한 것인지 끝은 언제일지 알 수 없다. IMF나 OECD 등 국제기구가 재정 확대를 권유한 데 따라 각국은 일단 재정을 집중적으로 풀고 있다. 이 와중에 만약 재정집행통로인 재정정보시스템(FMIS)마저 코로나 때문에 멈춰 선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컴퓨터 바이러스가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산시스템을 마비시키냐고? 오히려 쉽다. 시스템 운영 필수 인력이 대규모로 감염·격리되면 중단된다. 그동안 수없이 반복한 해킹방지훈련도 장애복구훈련도 감염병 앞에서는 소용 없다. 그래서 세계은행(WB)·미주개발은행(IDB)이 한국재정정보원에 요청했다. “한국은 재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도 K-방역처럼 뭔가 체계적 대응이 있는 것 같은데, 세계와 공유해달라”고.



〈세계은행 주최 세미나 포스터〉

## 1 —————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에서 각국 모두 재정이 ‘원톱’ 역할

이번 경제위기에서 재정의 역할은, 축구로 치면 거의 ‘원톱’ 수준이다. 각국이 통화정책, 금융정책, 재정정책을 조합(Policy Mix)해 위기에 대응하고 있지만, 효과의 즉시성에서든 그 크기에서든 재정정책이 단연 돋보인다. 감염병이 촉발한 경제위기이다 보니 전례가 없고, 그래서 IMF와 OECD의 처방도 사실 재정 확대 이외에 표족한 게 없다.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는 신속하게 풀고,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풀라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국과 일본의 재정 대응 규모는 각각 GDP의 7.8%와 8.7%에 이르고, 경제적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독일도 4.4%나 된다.

한국도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했고, 35.1조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도 이달 초 국회에서 통과됐다. 다 합치면 59.0조원이나 되며<sup>1</sup>, 이는 1998년 외환위기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추가경정예산 규모보다 훨씬 크다<sup>2</sup>. 이런 정책 대응에 덧붙여 성공적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면서, OECD와 IMF는 한국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up>3</sup>. 한국 정부는 현재의 위기를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앞으로도 정책과 자원을 총동원한다는 입장이다.

<sup>1</sup> 제1회 추경 11.7조원 + 제2회 추경 12.2조원 + 제3회 추경 35.1조원 = 59.0조원

<sup>2</sup> 1998년 13.9조원, 2009년 28.4조원

<sup>3</sup> OECD “20년 세계성장률 -6.0%, 회원국 평균 -7.5%, 한국 -1.2% 전망”(2020.6.10), IMF “세계 평균 -4.9%, 선진국 평균 -8.0%, 한국 -2.1%”(2020.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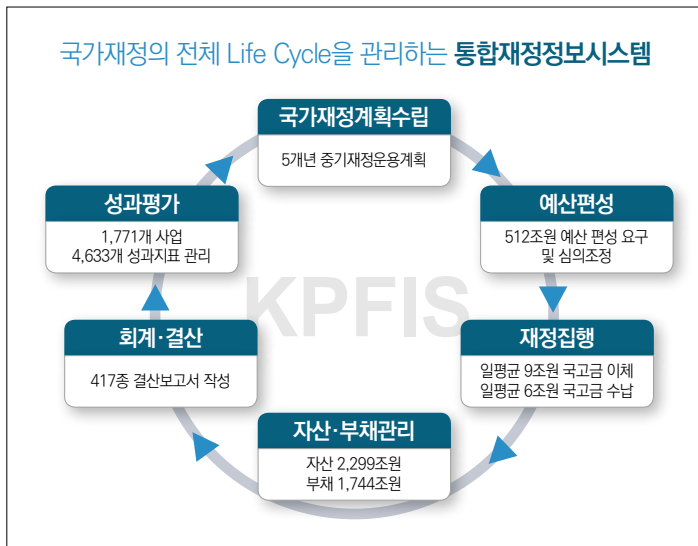
## 2 국가재정활동에는 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필수

정부의 재정 확대나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를 흔히들 ‘헬리콥터 머니’로 비유하지만 실제로 현금 뭉치를 공중에서 살포할 리는 없다. 재정은 어떤 통로를 거쳐 집행될까? 바로 재정정보시스템(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이하 FMIS)이다. 민간업체에 다리·도로 공사대금을 주든, 실직자에게 실업수당을 늘려주든,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든 나랏돈은 반드시 재정정보시스템의 전부 혹은 일부를 거쳐서 대상자에게 흘러간다. 따라서 주요 국가들은 모두 이런 재정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의 재정정보시스템 이름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dBrain)이다.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 소유이고,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다. dBrain, 즉 ‘디지털 뇌(腦)’라는 애칭에서 볼 수 있듯이 똑똑한 기능이 많다. 그래서 2013년 UN 공공행정대상을 받은 적도 있다. 영국은 OSCAR, 미국은 FMS, 스웨덴은 HERMES, 캐나다 FM-SC, 멕시코 SIDAFF 등 나라마다 재정정보시스템 이름과 기능이 다르다.



그림 1. dBrain 주요 기능 및 운영 현황



주 1) 2019년 기준

2) DBAS는 Digital Budget and Accounting System의 약자

3) dBrain은 digital을 의미하는 'D'와 Brain이 조합된 형태

우리나라는 연간 500조원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이 dBrain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1,080조원대의 국유재산 관리 업무도 dBrain을 기반으로 수행된다. 코로나19 사태처럼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예비비를 풀든, 경제 위기에 대응하려고 추경을 편성·집행하든 모두 dBrain을 거쳐야 한다. 정부 재정활동의 근간인 셈이다. 그렇다 보니 dBrain에서 하루 이체되는 금액이 무려 8.7조원이나 된다. 만약 dBrain이 멈추면 정부의 재정정책도 멈춘다.

### 3 ————— ‘Before COVID-19’ 시대엔 해킹방어와 장애예방이 ‘재정정보시스템 업무연속성(BCP)’ 확보의 핵심

이렇게 중요한 시스템이다 보니 각국은 이 시스템이 혹시 해킹 당하거나 장애로 멈춰 설까 걱정이다. 같은 돈이라도 제때 제대로 써야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른바 ‘가성비’ 높게 재정을 쓰려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필수이다. 따라서 국가재정활동의 업무연속성(BCP : Business Continuity Plan) 확보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여서 장애 방지 예방활동은 물론이고 장애를 상정해 주시스템(대전 소재) 대신 보조시스템(광주 소재)을 가동하는 재해복구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전산장비 일일 점검 분야는 2019년 284개에서 올해 396개로 대폭 늘렸다. 안전한국훈련 참가, 모의 해킹, DDoS 훈련도 빼놓지 않는다. 시스템이 구축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에 맡겨 운영할 때는 30여건의 크고 작은 장애가 잦았지만, 시스템 운영 전담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이 맡은 이후에는 야간시간에 1건 발생하는 데 그쳤다.

그림 2. dBrain 재해복구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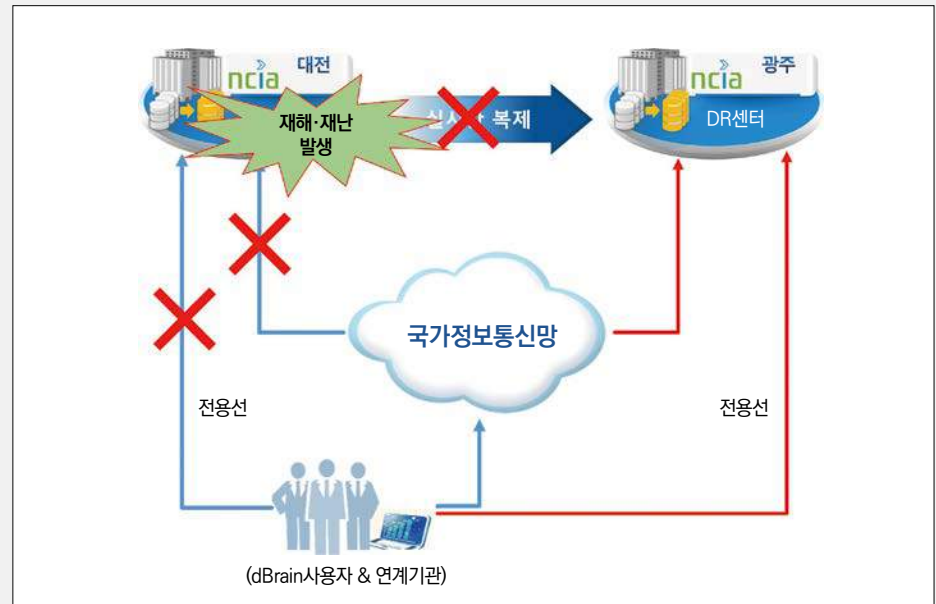


그림 3. 국제 온라인세미나 발표 및 주요 발연자 공지 화면



#### 4. 시스템만 방어? 운영인력 포괄해야 제대로 된 업무연속성(BCP)

그런데 이번 경제위기는 사람, 즉 감염병에 사람이 빠르게 전염됨으로써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발생 경로를 갖고 있다. 재정정보시스템이 해킹이나 장애가 아닌 시스템 운영인력의 감염으로 멈출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지점에서 각국의 고민이 시작됐다. “장애복구 훈련이나 해킹방어 훈련 백날 하면 뭐하나? 코로나 확진으로 시스템 운영인력이 대규모로 입원·격리되면 어찌지? 운영인력이 없으면 시스템이 멈추고, 결국 국가재정활동도 멈출 텐데?”

결국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은 지난 5월 한국재정정보원에 “한국은 K-방역으로 이미 전 세계의 모델이 되었으니, 아마 재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도 뭔가 체계적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공유할 수 있을까?”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국제기구가 제안한 세미나 이름 자체가 K-방역의 위상을 함축하고 있다. 세계은행 세미나는 ‘KPFIS response to COVID-19 : Learning from dBrain resilience’이다. 한국재정정보원(KPFIS)의 코로나 19 대응을 통해 dBrain 회복력을 배운다는 취지다. 6월 16일 부탄, 베트남, 헝가리,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등 세계은행이 초청한 개도국 재정담당 공무원과 미국·중국·몽골 등 세계은행이 운영하는 재정정보시스템 교육모임(FMIS CoP) 회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미주개발은행 주최 세미나 주제는 ‘FMIS operations under the COVID-19 pandemic: The Korean Experience’이다. 중남미 24개국 재무부 고위공무원 147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10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 5 ————— 한국의 ‘감염병 속 업무연속성 확보’를 이해하는 5가지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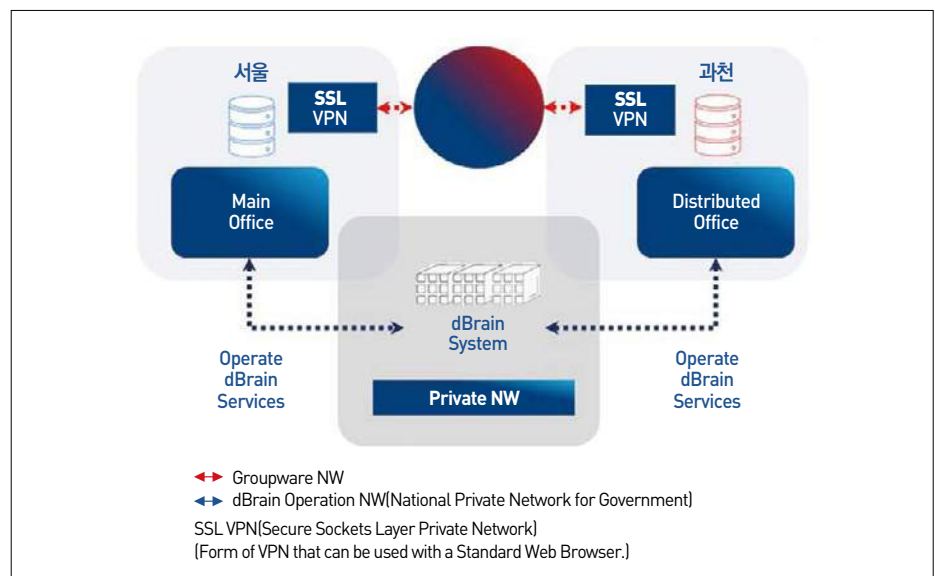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은 강하고 빠른 전염성 때문이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건물을 폐쇄하고,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2주간 격리된다. 확진자 및 격리자가 맡고 있던 업무의 중요성, 즉 그것이 교육이든 병원이든 재정정보시스템 운영이든 모두 무시된다. 한 건물, 한 회사, 한 부서가 길게는 2주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감염병에 의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처음인 것처럼, 감염병에 의한 재정정보시스템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감염병을 지진, 해킹, 화재 등 여러 자연 및 사회적 재난에 포함해두긴 했지만, 시스템 중단까지 상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한국의 ‘코로나19 상황 속 업무연속성 확보’도 계속 보완 중이며, 현재도 발전 중이다. 온라인 세미나에서 발표한 한국의 대응을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봤다. 물론 향후 ‘글로벌 스탠더드’에 이르려면 더욱 발전되고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 ① (분산과 연결) 여러 바구니에 담되 ICT 기술로 연결하기

한국재정정보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 맞은편 21층 민간건물의 5개 층(17~21층)을 임대해 사용 중이고, dBrain 운영인력 90여명은 이 중 19~20층에서 일한다. 정부가 정한 코로나 방역 수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dBrain운영본부에서 확진자 발생 시 운영인력이 거의 전원 격리되고 시설이 폐쇄되는, 즉 ‘전멸’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분산근무가

그림 4. 분산과 연결 개념도



시급했다. 문제는 dBrain 운영 업무의 특성상 국가전용망이 깔린 곳에서만 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보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정부과천청사에 임시사무실 구축공사를 시작했다. 공사 기간은 2주였다. 정보원은 임시사무실 완공 이전에 ‘전원 격리’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시스템 유지 필수인력 17명을 2월 27일 일단 재택근무로 분산시켰다. 국가전용망이 없지만, 집에서도 PC로 일정 부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상망(GVPN<sup>4</sup>)을 구축했다. 분산시키지만 업무는 연결시킨 것이다. 인프라 유지·보수인력도 서울 본원과 대전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분산시켰다. 이어 3월10일 과천청사 임시사무실을 개소하고, dBrain·e나라도움 운영인력 등 37명을 분산시켰다. 서울 본원 건물 폐쇄나 전 직원 격리 등 어떤 상황에서도 재정정보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과천청사 임시사무실 사용기간이 종료된 6월 20일 이후에는 회사 맞은편 연세빌딩에 임시사무실을 구축해 분산근무 체제를 4개월 넘게 유지 중이다.

## ② (선택과 집중) 최후에 무엇을 살릴지 ‘핵심 기능 우선순위’ 정하기

dBrain·e나라도움 등 재정정보시스템 운영인력의 15%~25%를 빼내 과천 임시사무실로 분산시킬 때의 기준은 하나였다.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작동해야 하는 핵심 기능을 선택해 그 업무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dBrain의 수백 가지 기능을 위기상황에서도 100% 완벽하게 작동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산의 편성·배정·변경·이월, 채권의 회수·변경·마감·소멸, 물품의 교환·매각·양여·불용·대부 등 방대하고 복잡한 기능을 죽 나열해두고 업무 우선순위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원 기능의 경우 당연히 1순위다. 법에 기한이



<sup>4</sup> Government Virtual Private Network의 약자로, 출장지나 집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상사설망이다.

정해져 있는 재정업무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위기상황 단계별로 업무의 경중을 재고 우선순위를 따진 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인력을 각 부서에서 계산하고, 분산근무 인원에게 미션을 주는 방식이다.

③ (고객 접점) 시스템 사용자들과의 1차 접점을 안전하게 보호

dBrain은 국민에겐 낯선 플랫폼이지만 재정 담당 공무원들은 단돈 1원을 써도 dBrain을 통해야 한다. 문제는 어렵다는 점이다. 익혀야 할 기능이 수백가지인데, 공무원은 순환보직 제라서 1~2년 단위로 업무가 바뀐다. 그렇다보니 dBrain을 운영하는 한국재정정보보원에는 공무원들의 문의전화가 하루 평균 1,500통이나 걸려온다. 과오납 처리, 불납결손, 내부거

래 제거, 결산분개 등 문의 내용도 수천가지에 이른다. 이런 문의 전화를 받아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곳이 사용자지원센터, 흔히 말하는 콜센터다. dBrain 사용자들의 1차 접점은 바로 이 콜센터인데, 외주로 운영 중이다. 주지하다시피 콜센터는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근무환경 중 하나이다. 근무 밀집도가 높고, 온종일 말하고, 밀폐된 환경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때문에 정부는 콜센터 운영회사에 “밀집도를 낮추라”고 권고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않은 주문이다. 공간 확대는 곧 돈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무실만 확보한다고 콜센터가 작동할 리 없다. 교환기를 비롯해 인·아웃바운드 장비, 상담 이력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도 다 돈이다.

이에 재정정보원은 정보원 공간 일부를 콜센터 직원들의 분산근

무 장소로 선풍 내렸다. 32명이 오밀조밀 근무하던 콜센터에 17명만 남도록 하고 나머지는 재정정보원이 제공한 교육장으로 근무지를 옮김으로써 밀집도를 확 낮췄다. 또한 콜센터 직원 간 투명 칸막이를 설치해 상담 도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말이 옆 동료에게 튀는 것을 방지했다. 콜센터 분산에 따른 통신망도 정보원이 제공했다. 분산 운영으로 응대율이 떨어지는 것을 명시적으로 용인해주고, 사용자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응해 채팅서비스를 확대하도록 지원했다.

④ (비대면) 업무환경에서도 사용자 지원에서도 비대면 강화

재정정보원이 발 빠르게 분산근무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정부 및 정보원에 비대면 업무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재택근무자에게도 GVPN, 정보원 ERP시스템, 영상회의 시스템 등을 통해 출근, 근태 관리, 결재, 자료 공유, 회의 참여 등이 지원됐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의 스토리지 및 업무자료 공유저장소는 보안과 원격근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도구가 됐다. 직원들이 생산한 모든 자료는 책상 위 PC가 아니라 클라우드 저장소에 저장된다. 안방 장롱에 금괴를 두고 자물쇠를 여러 개 다는 것보다 은행 금고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한 것과 같은 이치다. 동시에 언제 어디에서든 클라우드에 접속하면 업무를 이어서 할 수 있다.

사용자 지원 업무도 비대면 환경에 맞춰 빠르게 재편했다. 사용자들이 dBrain 사용 시 기술적 오류를 호소하면 즉시 원격으로 사용자 PC에 접속해 보안프로그램 설치나 OS버전 패치 등을 해결해주었다. 집합교육은 당연히 화상교육으로 대체했고, 채팅과 게시판 기능을 강화해 사용자들의 문의사항을 비대면으로 지원했다. 임시사무실로 분산시킨 뒤에도 본원과 임시사무실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나눠 공유했다.

#### ⑤ (매뉴얼)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두가 알 수 있게

정보원은 2019년에 위기대응매뉴얼을 현행화하면서 지진, 화재, 해킹 등 통상적인 자연적·사회적 재난 이외에 감염병을 추가했다. 이 매뉴얼에 따라 1월 29일 안전경영추진단(단장 상임이사)이 4단계<sup>5</sup> 조치 중 ‘일반상황’을 발령했다. 아울러 손 세정제와

체온계 지급, 발열 여부 전수 조사, 교육장 폐쇄, 대면회의 및 출장의

원칙적 금지 등 방역수칙을 정해 준수하도록 했다. 2월 24일에

는 대응단계를 ‘주의상황’으로 격상하고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부서장에게 이상 소견자 및 감염원 노출자에 대해

△선제적 자가격리 및 해제 결정 △격리 기간 결정 및 조정

△격리 시 주의사항 준수 여부 점검 △대체업무자 지정

등의 권한도 부여했다. 특히 ‘확진자 발생 지점에 따른

복무 시나리오’를 만들어 누구든지 확진자 발생 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업무를 하면 되는지를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

지만, 발생 시 일사불란한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다.



<sup>5</sup> 재정정보원 감염병 대응 단계: 일반 → 관찰 → 주의 → 긴급



## 6 \_\_\_\_\_ ‘After COVID-19’ 시대에 맞춰 재정정보시스템 업무연속성을 재정의해야

모든 분야에서 대전환기이다. 세미나에서 켄 데너(Cem Dener) 세계은행 수석전문가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재정정보원이 전 세계 회원국 재정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재정정보시스템 담당자들의 역량 개발 프로그램(FMIS Capacity Building Program)의 연장선상이라고 언급했듯이 이제 시스템 운영 업무에 감염병 대처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김재훈 재정정보원장도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경험 자체가 세미나 참가국들에 자산이 될 것”이라고 경험 공유의 의미를 설명했다.

실제로 환경단체는 물론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이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일회성 돌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 경제환경”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머지않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또 다른 감염병이나 생태적 재난이 상시화한다는 것이다. 재정정보시스템 운영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라는 조어가 “우리의 생활, 일, 경제활동방식 등에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재정정보시스템 운영도 바뀔 수밖에 없다. 특히 업무연속성 확보가 기존처럼 해킹탐지나 장애복구에 머물러선 안 될 것이다. 운영인력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비대면 근무환경을 강화하고,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비대면 교육·상담이 가능하도록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이제 업무연속성 확보의 핵심일 수 있다. 각국은 이번 위기에서 국경을 봉쇄하고 수출입을 통제하는 등 각자도생에 나섰지만, 재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들은 코로나 이후 업무연속성 확보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업무연속성의 개념과 내용을 재정의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고, 이번 세미나가 그 첫발일 것이다.

①

# 그린 뉴딜 : 경제위기와 기후위기 극복의 대안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hongjongho@snu.ac.kr)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 후폭풍이 무섭다. 올해 세계 경제전망은 2차 세계대전 후 75년간 볼 수 없었던 암울한 수치로 점철돼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가장 최근 발표한 수정 경제성장 전망치를 보면, 2020년 세계 경제는 -4.9%, 미국은 -8.0%, 유로존은 -10.2%, 그리고 한국은 -2.1%로 예측했다.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글로벌 대참사다. 만약 올해 하반기까지 코로나19 확산이 약화되지 않는다면 경제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것이다.





2020년 초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대주제는 기후변화였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활동의 결과물로 기후변화가 야기된다는 과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그동안 정치권과 산업계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기후변화가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치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약받고 대규모의 경제 및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까지 부인할 수는 없었다. 기후변화는 세계 곳곳에서 실제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다. 폭염과 호우, 가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산업시설이 파괴되며,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기후변화는 기후위기로, 나아가 기후 비상사태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먼저 나섰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폰 데어 라이엔 의장은 코로나발(發) 경제위기 극복을 언급하면서 “유럽의 그린 딜(Green Deal)은 새로운 성장전략이다. 그린 딜은 탄소를 감축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럽 그린 딜의 핵심은 경제성장과 자원 및 에너지 이용의 탈동조화(Decoupling)에 있다. 더이상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방식의 에너지 공급구조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모든 EU 역내 국가들의 정책 입안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주류화(Mainstreaming)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경제와 환경, 개발과 생태는 상충된다는 케케묵은 이분법이 깨지는 순간이다. EU는 그린 딜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7년간 약 1,000조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이 우여곡절 끝에 포함됐다. 국회가 확정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 35.1조원 중 그린 뉴딜 관련 사업은 1.22조원으로 3.4% 비중이다. 디지털 뉴딜로 2.63조원이 책정돼 있음을 감안하면 큰 규모는 아니다. 정부는 그린 뉴딜에 향후 5년간 총 42.7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유럽의 그린 딜 사업 규모와 비교하면 아직 작은 수준이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법, 주어진 예산을 적재적소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해야만 그린 뉴딜이 지향하는 목표와 전략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높아질 것이다.

그만큼 재정건전성 훼손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다. 2020년 세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총 59조원 이상이 투입되고, 이중 국채로 조달하는 규모가 35조 5천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과 국가채무 비율이 각각 6%와 45% 전후로 전망된다. 일찍이 정부 재정운용사(史)에서 가보지 않은 길이다. 확장 재정정책의 성패는 당장 위기에 빠진 기업과 자영업자를 회생시키고 경기를 부양하여 민간투자와 일자리, 소득 창출을 유발하는 선순환 실현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런 뉴딜이란 무엇인가? 뉴딜은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을 위한 정부와 국민 사이의 협약'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세상은 코로나19 이전(BC)과 이후(AC)로 나뉠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그린 뉴딜은 뉴딜이 녹색을 지향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성장과 보전을 조화하여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뉴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시스템을 종식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효율을 전면에 내건 사회경제구조로의 전환이 핵심가치다. 단순히 기후 문제만을 위한 해법이 아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을 창출하는, 효과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성장 전략이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그린 뉴딜을 추진해야 할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의 역설이다. 팬데믹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공기와 물 등, 환경이 깨끗해지는 역설적인 현상을 경험함으로써 전 세계가 경제와 환경 간 선순환 구조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는 최악의 공기오염 도시인 인도의 델리에서 히말라야산맥이 보이고, 서울에서 미세먼지가 사라진 현상을 체험하고 있다.

둘째, 경기부양 효과다. 그린 뉴딜 사업은 태양광과 풍력 등 분산형 발전 방식이 확대되면서 이들을 연결하는 전력망을 설치하고, 빔물의 효율적인 사용과 상하수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지하망에 대한 재투자를 포함한다. 이들은 모두 산업파급 효과와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사업들로서, AICBM(인공지능(A), 사물인터넷(I), 클라우드(C), 빅데이터(B), 모바일(M)) 디지털 기술과 융합이 가능한 스마트 SOC 사업이다.



셋째, 혁신 효과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에너지 시장 및 산업은 격변과 혁신의 용광로다. 기술혁신과 시장개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가 곳곳에서 달성되고 있다. 블레이드 지름이 200미터가 넘는 용량 10MW 이상의 초대형 해상풍력 발전기가 속속 개발, 설치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정부의 강력한 통제 하에 놓여 있음으로써 경제 주체에 대한 의사결정 신호(Signal)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전력 시장은 온갖 칸막이와 규제로 신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산업은 혁신 잠재력이 가장 크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혁신하지 못한 분야다. 그린 뉴딜 정책으로 기업과 소비자에게 혁신과 변화의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

넷째, 주민 소득창출 및 국가 균형발전 효과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은 분산형이자 주민참여형 특성을 지닌다. 지역에 소재한 중소 발전사업자들과 건설업체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민들에게 지속가능한 소득원이 될 수 있다. 이미 에너지협동조합이나 주민 지분참여형 방식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주민의 유기적 협력과 상생 구조가 정착된다면 재생에너지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수익성 확보와 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 창출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기업 회귀(Reshoring) 효과다. 코로나19는 국제무역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추동할 조짐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는 글로벌 기업들로 하여금 생산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분위기를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국 기업의 국내 회귀와 해외 첨단기업의 한국 투자를 위해서는 RE100이라는 거대한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RE100이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를 의미하는데, 이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은 물론, 중간재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함을 말한다. 따라서 시장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충과 계통망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미증유의 경제위기와 날로 격화되는 기후위기 앞에 그린 뉴딜이라는 대안이 놓여 있다. 그린 뉴딜을 통해 우리 경제와 국토, 후손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의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

## 그린 뉴딜의 재원조달 방향

이동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dgyi77@uos.ac.kr)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이 이어지고 있다. 며칠 전에는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특히 한국판 뉴딜이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요약되는데 이 중 그린 뉴딜은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하면서 관련 산업을 부양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일련의 정책 방안이다.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선도 녹색산업의 육성과 주력 제조업의 녹색전환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친환경적이면서도 혁신적으로 조성하며,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그린 뉴딜의 진행을 위해 올해 1.22조원을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73.4조원(국비 42.7조원) 수준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6년간 연평균 7조원 수준의 국비 재원은 환경 분야 정책에 대한 재정지출로는 상당한 규모이다. 이렇다 보니 과연 해당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때는 먼저 기존 사업의 여유자금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별회계에 배정된 재원 중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치된 자금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차(次) 순위로는 기존 사업들의 예산을 조금씩 절약하고 재배정하여 추가 사업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면 추가 부담이 따르는 수단을 고민하게 된다. 그린 뉴딜도 이러한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재원조달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의 호응과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원조달책이 될 것이다.

우선, 그린 뉴딜과의 관련성이 크면서 여유자금이 있는 기존 사업으로는 에너지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들 수 있다.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이라는 그린 뉴딜 사업의 큰 축은 에너지특별회계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렇지만 현재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확보하고 있는 여유자금의 규모는 수년에 걸쳐 누적된 것이어서, 그린 뉴딜 첫해의 일회성 지출에 사용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어도 앞으로 중기적으로 지속될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다음으로, 기존 사업에 배분되는 재원을 조정하는 방안이 있다. 여기에는 교통 에너지환경세의 세입을 재배분하는 방안과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수입 활용안이 대표적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은 80%를 교통시설특별회계, 15%는 환경개선특별회계, 3%는 일반회계, 2%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배분해 왔으며, 올해 교통시설특별회계에 73%, 환경개선특별회계에 25%, 지역발전특별회계에 2%를 배분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목적세라는 점에서도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환경산업, 에너지 관련 사업에 지출하려는 그린 뉴딜로의 자원 배분을 추가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사업의 내용상 연관성이 교통시설특별회계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세입 배분의 일부를 조정하여 세수의 10%만 그린 뉴딜에 활용(예를 들어, 교통시설특별회계 68%, 환경개선특별회계 20%, 그린 뉴딜 10%, 지역발전특별회계 2%)하여도 매년 약 1.5조원의 재원이 확보된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수입도 제도의 취지로 볼 때,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하려는 그린 뉴딜에 해당 사업수입을 배분하는 것은 매우 목적 일관적인 자원 활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제3기가 시작되면서 유상할당 비율이 10%로 증가하게 된다. 최근 배출권 가격이 톤당 4만원을 상회하기 시작하였는데 톤당 4만원으로만 가정해도 제3기의 유상할당 경매수입은 약 4.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은 계속 높일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경매수입은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활용하면 그린 뉴딜에 필요한 투자금의 상당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GREEN NEW DEAL

● ● ●

**한국판 뉴딜 중 그린 뉴딜은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하면서  
관련 산업을 부양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일련의 정책방안이다.**

마지막으로는, 추가부담을 고려할 수 있겠는데 환경 분야에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탄소세 내지는 기후환경세 등을 도입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그린 뉴딜을 하기 위해 신규 세목을 만드는 것은 정책의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탄소세 등을 도입하더라도 이는 국가가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해야지 그린 뉴딜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신규 세목을 도입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맞지 않는다. 또한, 탄소세 등을 새로 도입하더라도 이중부담을 배제하기 위해 기존의 배출권거래제나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에 반영된 환경의 외부비용만큼 감세나 면세를 할 경우, 추가 세수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이상에서는 그린 뉴딜과 사업 성격이나 목적, 방향성이 연계되어있는 재원확보 방안들을 소개하였다.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소개한 방안들만 잘 활용해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설명자료에서 전망하고 있는 그린 뉴딜에 필요한 대부분의 예산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꾸어 말하면, 굳이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강요하지 않더라도 그린 뉴딜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팬데믹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재 상황을 미루어 볼 때 경제활성화를 위해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효과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은 최소화되도록 그린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 ‘새로운 100년으로의 대전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 창출  
- 디지털·그린·안전망 3대 축으로 9대 분야 28개 프로젝트 제시

정부가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3대 축으로 우리나라 경제·사회구조를 대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를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를 ‘포용 사회’로 바꾼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부 발표 내용 위주로 살펴본다.

황순구 재정정보분석본부 본부장(rock510@kpfis.or.kr)



## 왜 지금 한국판 뉴딜인가?

저성장·양극화 및 경기침체에 정면으로 맞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sup>1</sup>, 양극화도 심화하는 데다<sup>2</sup>, 코로나19로 인해 성장 경로 자체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얼마나 빨리 회복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개혁하느냐가 향후 국가 및 경제의 위상을 좌우하리라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단순한 경기 대응을 넘어 대공황 당시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국가발전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런 정부 인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대전환 선언”이라고 정의한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를 통해 정부가 가고자 하는 미래상은

<sup>1</sup> 연평균 성장률: 1990년대 6.9% → 2000년대 4.4% → 2010년대 2.9%

<sup>2</sup> 연평균 소득 5분위 배율: 1990년대 3.86 → 2000년대 4.52 → 2010년대 4.57

△D·N·A(Data·Network·AI)를 기반으로 한 '똑똑한 나라' △탄소 중립(Net-Zero)을 통한 '그린 선도 국가'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이 작동하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이다. 강력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당정 추진본부, 실무지원단 등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 분야별 투자계획과 일자리 효과는?

2025년까지 총 투자 규모는 국비 114조원에 민간·지자체 투자분을 합해 총 160조원이다. 이를 통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혔던 '76조원 투자 + 55만개 일자리'를 크게 웃돈다. 시기별로는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6.3조원(국비 4.8조원)을 비롯해, 2021~2022년은 누적 규모로 67.7조원(국비 49.0조원), 2023~2025년 역시 누적 규모로 160.0조원(국비 114.1조원) 등 3단계<sup>3</sup>로 진행된다. 분야별로는 △디지털 뉴딜 58.2조원에 일자리 90.3만개 △그린 뉴딜 73.4조원에 일자리 65.9만개 △안전망 강화 28.4조원에 33.9만개 등이다.

### 디지털 뉴딜 : 지능형 정부, 데이터 댐, 스마트 의료 인프라 등

우선 정부는 디지털화가 국가 및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국가'와 '비대면 육성'을 양대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추진 방향으로 △D·N·A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를 꼽았다. 5G 및 AI를 1~3차 모든 산업에 접목시키고, 지능형 정부를 구현하고, 모든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노트북·태블릿·온라인 교과서를 공급할 계획이다. 비대면 분야에서는 스마트 의료, 돌봄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원격근무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키오스크·서빙로봇·QR코드 등을 갖춘 스마트 상점을 10만개로 늘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 공방을 1만개 만드는 것도 포함했다.

3 2020년 대전환 착수기 → 2021~2022년 디딤돌 마련기  
→ 2023~2025년 대전환 착근기



## 그린 뉴딜 : 녹색 인프라,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녹색산업 혁신 등

그린 뉴딜은 인프라 및 에너지를 녹색으로 전환하고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도시, 공간, 생활 등의 인프라를 녹색으로 바꾼다. 학교에 태양광과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공공건물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재원은 정부 직접투자와 임대형 민자(BTL)가 병행된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숲 630ha, 생활밀착형 숲 216개소, 자녀 안심 그린 숲 370개소 등 도심 녹지도 순차적으로 조성된다. 자연생태계 기능 회복을 위해서 국립공원 16곳과 갯벌 4.5km<sup>2</sup>를 복원한다. 상하수도를 지능형으로 바꾸고, 상습 침수 및 악취지역에 대한 개선사업도 벌인다. 스마트 전력망 구축, 전선 지중화, 풍력·태양광 에너지 생산,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확대,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등도 그린 뉴딜의 대표 사업들이다.



## 안전망 강화 : 전국민 고용안전망, 디지털·그린 인재 육성 등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현재의 경제충격에 더해 디지털·그린 뉴딜로의 대전환으로 일자리 미스매치와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수라는 것이다. 특히 미래의 고용시장 및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람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예술인·특수형태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오는 9월까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한국형 상병수당도 2022년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산학협력연구단을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40개 운영함으로써 AI·SW 핵심인재를 10만명 육성한다. 기업·대학의 실무인재 양성을 돕는 K-디지털 트레이닝, 공동 훈련센터를 중소기업에 개방하는 K-디

핵심인재 확보

직업훈련

디지털 접근성 강화



지털 플랫폼, 대학생 대상 신기술 융합전공을 지원하는 K-디지털 플러스 등도 있다. 농어촌 및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주기 위해 1,200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해주고, 6,000곳에 디지털 역량센터를 설치한다.

### 한국판 뉴딜을 상징할 국가대표급 10대 과제 선정

정부는 또 경제활력 제고 및 파급력이 크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10대 대표선수급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 ① **데이터 댐** : 대공황기 뉴딜을 상징하는 후버댐 건설처럼 디지털 뉴딜을 상징하는 사업이다. 데이터의 수집·가공·거래·활용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모든 산업에 5G·AI를 융합시키는 것이 목표다.
- ② **지능형 정부** : 5G·블록체인·모바일 신기술을 적용해 'Paperless 정부서비스'와 언제 어디서든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 오피스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똑똑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9.7조 원이 투입된다.
- ③ **스마트 의료** : 비대면 의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IoT와 5G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병원 10곳을 구축하고, 간질환·폐암·당뇨 등 12개 질환을 인공지능이 진단하는 닥터 앤서사업이 추진된다.
- ④ **그린 스마트 스쿨** : 교육 환경을 녹색 및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15.3조원을 들여 노후학교 리모델링, 와이파이 100% 구축, 스마트 기기 지원, 디지털 콘텐츠 공급 등을 추진한다.
- ⑤ **디지털 트윈** : 현실과 똑같은 가상공간(Twin)을 구축함으로써 시뮬레이션을 통한 3D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3D 지도, 스마트 항만, 스마트 시티 등이 대표적이다.
- ⑥ **SOC 디지털화**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자원, 재난대응시설 등을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14.8조원이 투입된다.
- ⑦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 디지털 기반의 고생산성, 녹색 기반의 에너지 고효율·저오염 제조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클린팩토리, 스마트 산단,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의 세부사업이 있다.
- ⑧ **그린 리모델링** : 공공건축물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함으로써 제로 에너지화를 지향한다. 공공임대주택, 박물관, 노후 청사 등에 5.4조원이 투입된다.
- ⑨ **그린 에너지** :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녹색 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울산·전주·완주·안산 등에 수소도시를 조성한다.
- ⑩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보급, 수소차 20만대 보급, 수소 충전 인프라 450대 설치, 노후 경유차의 LPG·전기차 전환 지원, 수소차용 연료전지 개발 등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툇아보다 : 살살이 훑어 나가면서 살피다

##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담긴 한국판 뉴딜 주요 사업

우상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woosh@kpfis.or.kr)

( 디지털 뉴딜  
⇒ 2.63조원



### D.N.A. 생태계 강화

1.3조원

- 1·2·3차 초산업 5G·AI 융합 확산 ⇒ 0.66조원
  - AI 확산을 위한 7대(감염병 예측 예측 등) 프로젝트 추진
  - 중소기업 AI 솔루션 이용 바우처 추가 확대 (14→200건)
-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 0.54조원
  -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10→15개 분야) 및 공공데이터 (14만개) 순차 개방
  - AI 학습용 데이터 2022년까지 700종 구축
- 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 0.05조원
  - 5G 국가망 시범사업 실시
  - 5대 핵심 서비스·산업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 AI·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 0.04조원
  - AI·SW 분야 전문인력 9.4만명, AI 융합인재 0.6만명

### 비대면 산업 육성

0.75조원

- 중소기업 16만개에 원격근무 인프라 보급 ⇒ 0.31조원
  - 원격근무 시스템 이용 바우처 지원 및 공동 화상회의 인프라 구축
- 초·중·고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 0.25조원
  - 초·중·고 교실 WiFi망 구축 및 내용연수 초과 노트북 20만대 교체
  -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 태블릿 24만대 보급
-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 ⇒ 0.12조원
  -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설치 및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 0.06조원
  - 39개 국립대 노후서버·네트워크 전면교체
  - 10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

###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0.13조원

-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공공시설 WiFi 구축 ⇒ 0.10조원
  - 인터넷망 1,300곳 및 공공장소 WiFi 1만개 설치
  - 1천개소 디지털 교육센터 운영
- K-사이버 보안체계 구축 ⇒ 0.03조원
  - 중소기업 2,500개 보안컨설팅 지원
  - 철도·항공 등 150종 안전 관련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 SOC 디지털화

0.45조원

- 4대 핵심시설 디지털 안전관리 ⇒ 0.41조원
  -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 디지털화, 하천 수문제어시스템 설치
  - 공동구 스마트관리체계·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도시·산단·물류 스마트화 ⇒ 0.03조원
  - 인구 20만 이상 도시(108개)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 스마트산단 통합관제센터 및 물류자원공유 플랫폼 구축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0.40 조원

-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면 전환 ⇒ 0.34조원
  -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생활 SOC 등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 추진
- ICT 기반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 0.05조원
  - 광역·지방 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 스마트 그린도시 ⇒ 0.01조원
  - 환경혁신기술 활용 스마트 그린도시 선도프로젝트 100개 추진
  - 도시 숲 2023년까지 200개 조성

##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0.35 조원

- 녹색산업 육성 ⇒ 0.32조원
  - 혁신환경기술 보유기업 100개사 지원
  - 녹색산업 혁신거점 조성 및 전문인재·용자 공급
- 저탄소·녹색산업 조성 ⇒ 0.04조원
  - 스마트산업(7개소)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시범구축
  - 클린팩토리 700개소·스마트생태공장 100개소 구축 지원



##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0.47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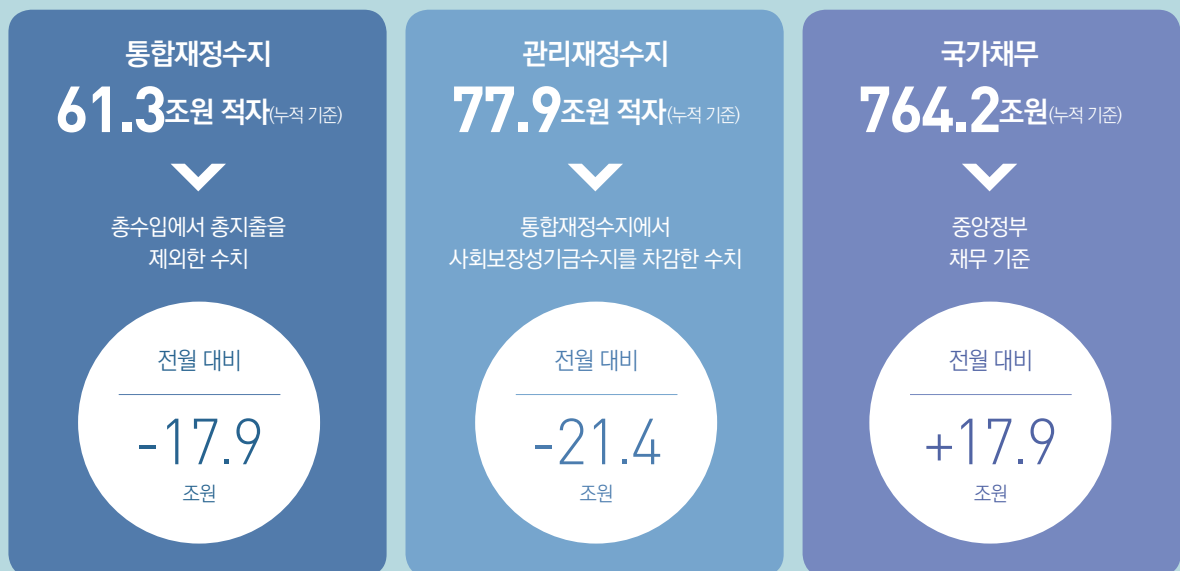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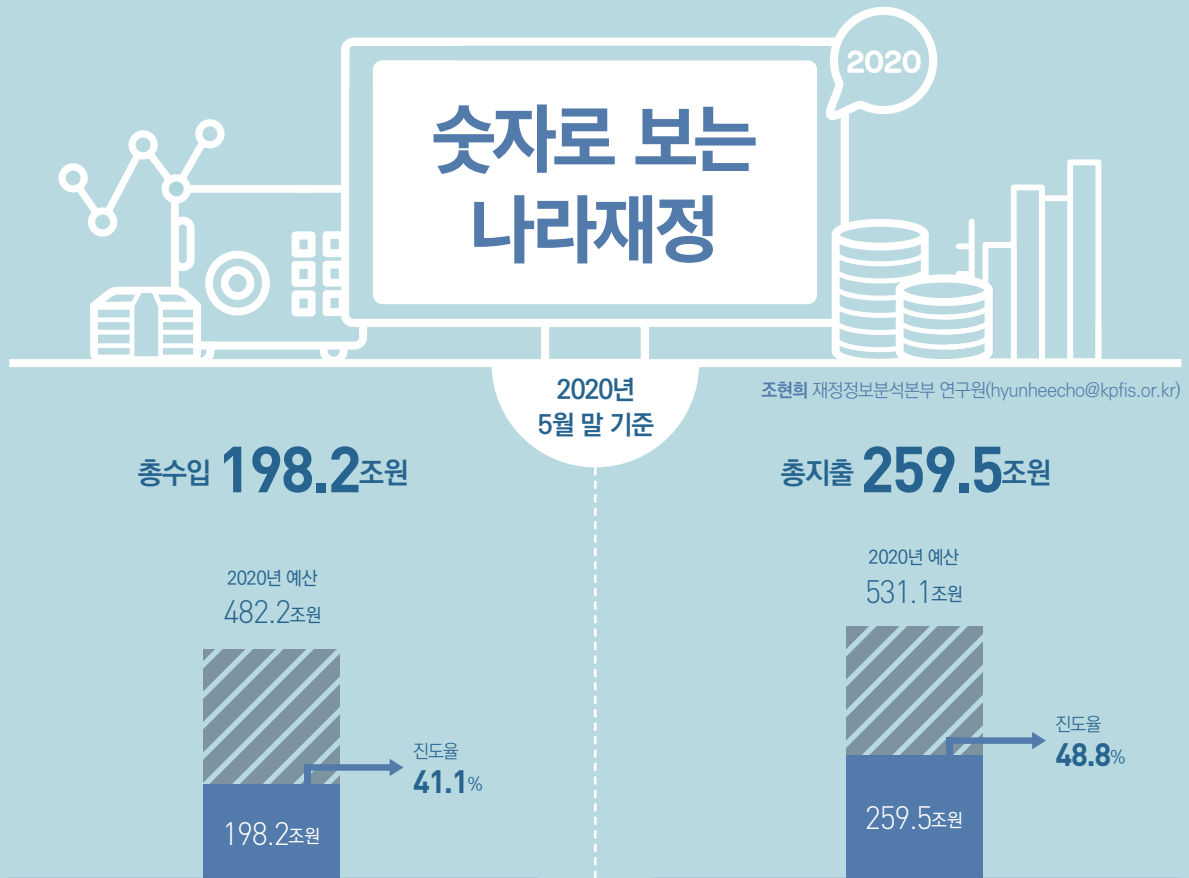
-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 0.29조원
  - 산단·주택·건물·농촌 태양광 보급 확대
  - 신재생에너지 등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녹색보증 신설
- 친환경 차량·선박으로 조기 전환 ⇒ 0.13조원
  - 경유 화물차·어린이 통학차량 15만대 친환경차 전환 지원
  - 전기이륜차 5.5만대 구매보조 및 노후 광공선 22척 조기교체
-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 0.05조원
  - 스마트미터기 교체 및 건물 에너지진단 등을 통한 빅데이터 구축
  - 태양광·해양풍력·LNG발전소 등 지능형 통합운영 플랫폼 개발

## 고용안전망 강화 ⇒ 1.0 조원



-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 0.6조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국민취업제도 등
- 고용진입·전환 지원 ⇒ 0.2조원
  - 청년인턴 지원, 청·장년층 신사업 분야 재취업 등
-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 0.1조원
  - 신기술 분야·생애주기별 직업훈련 체계 개편
- 산업안전·근무환경 혁신 ⇒ 0.1조원
  - 제조사업장 안전관리, 화재·폭발사고 예방 등

자료: 기획재정부(2020),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을 기초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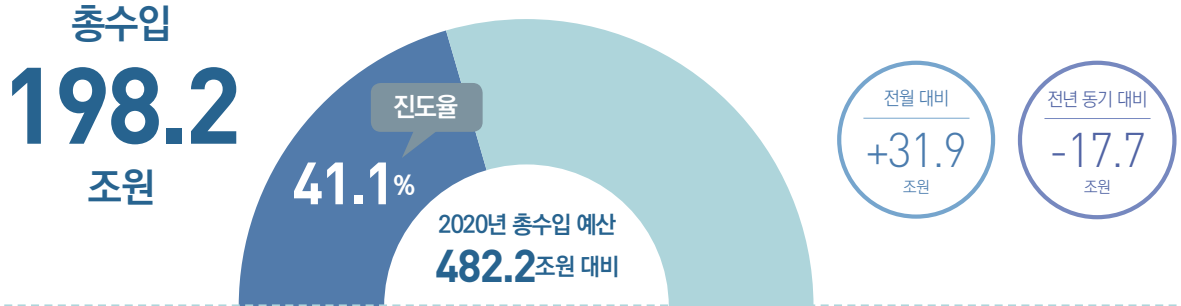
주 1) 2020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구성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0. 7.

## 총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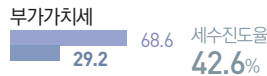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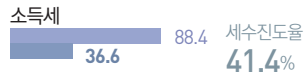
• 2020년 5월 말 기준



주 1) 총수입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수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0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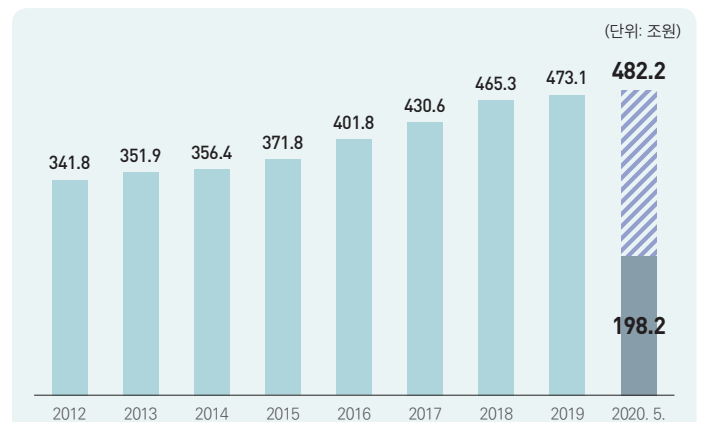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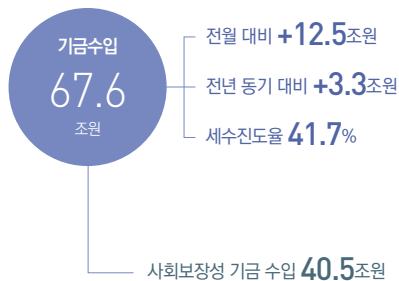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 2020년 예산  
■ 2020년 5월

주 1) 세수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대비 당월 누계 세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0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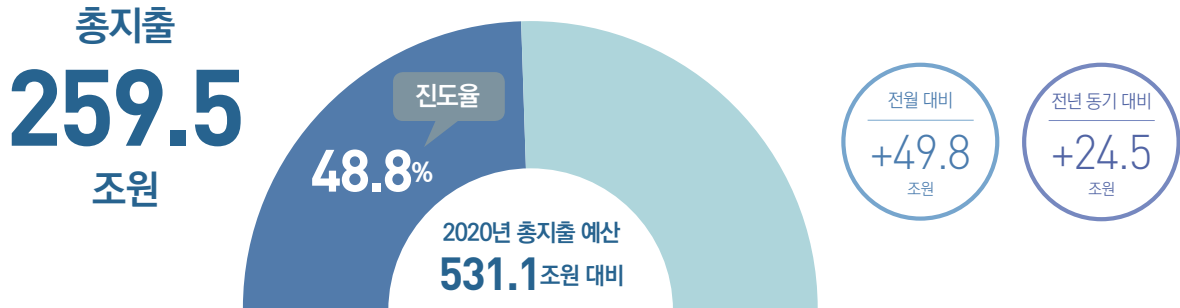


주: 2019년까지는 결산, 2020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 총 지출

• 2020년 5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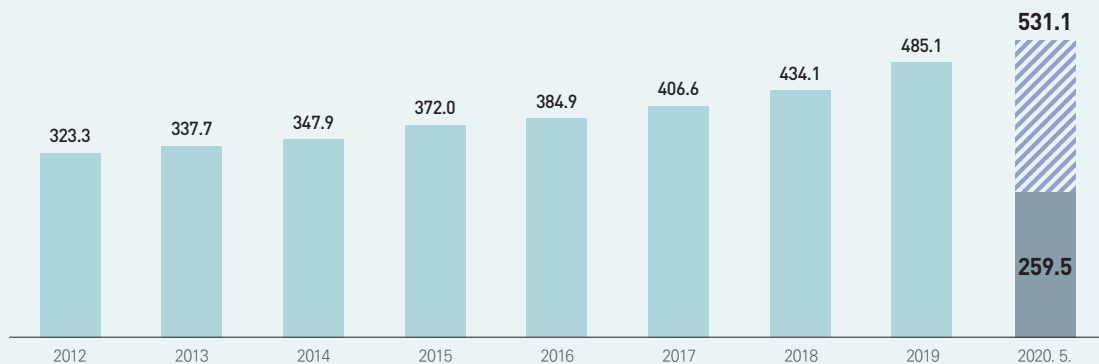
주 1) 총지출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지출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지출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0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단위: 조원)



주: 2019년까지는 결산, 2020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연간계획 대비 **53.3%**

**305.5**조원\*

연간계획

**162.9**조원

5월 집행액

**8.6**%p

전월(44.7%) 대비  
증가

\*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감액 반영으로 연간계획 조정(307.8조원 → 305.5조원)

(단위: 조원, %)

|      | 연간계획(A) | 5월 실적(B) | 집행률(B/A) |
|------|---------|----------|----------|
| 합 계  | 305.5   | 162.9    | 53.3     |
| 중앙부처 | 261.4   | 142.8    | 54.6     |
| 공공기관 | 44.1    | 20.1     | 45.6     |



2020



(단위: 조원, %)

## 상위 5개 부처

(누적 기준)

|   | 부처명       | 5월 실적 | 집행률  |
|---|-----------|-------|------|
| 1 | 중소벤처기업부   | 10.4  | 82.7 |
| 2 | 산업통상자원부   | 5.7   | 70.5 |
| 3 | 고용노동부     | 2.7   | 67.7 |
| 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6.3   | 65.3 |
| 5 | 보건복지부     | 13.3  | 64.4 |

주 1)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45개 중앙행정기관과 39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에 해당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2) 집행률은 해당 연도의 연간 계획 대비 당월 누계 실적 규모의 비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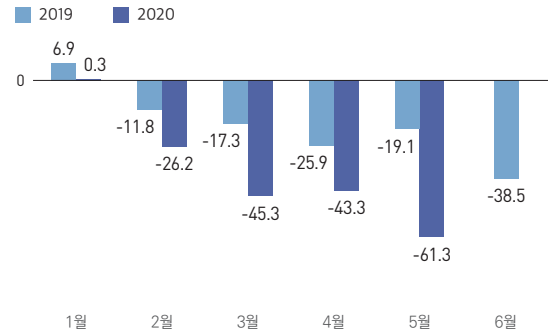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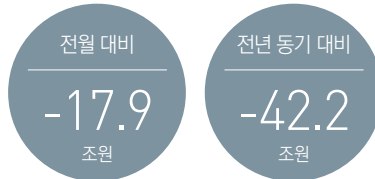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http://www.openfiscaldata.go.kr))

## 재정수지

• 2020년 5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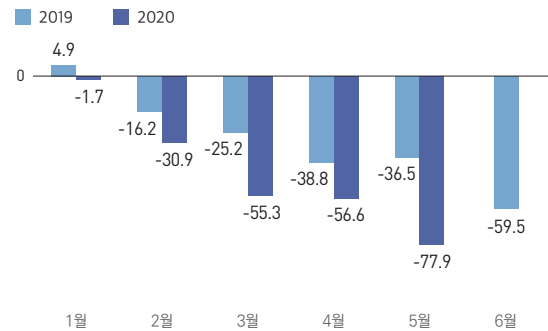
### 통합재정수지

**61.3조원 적자**



### 관리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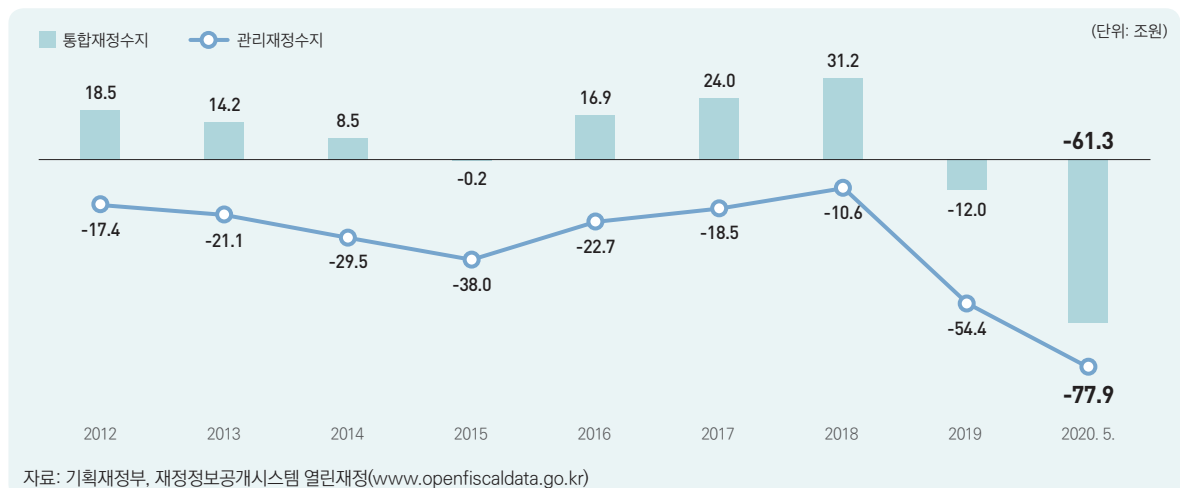
**77.9조원 적자**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6.6조원 흑자**

-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http://www.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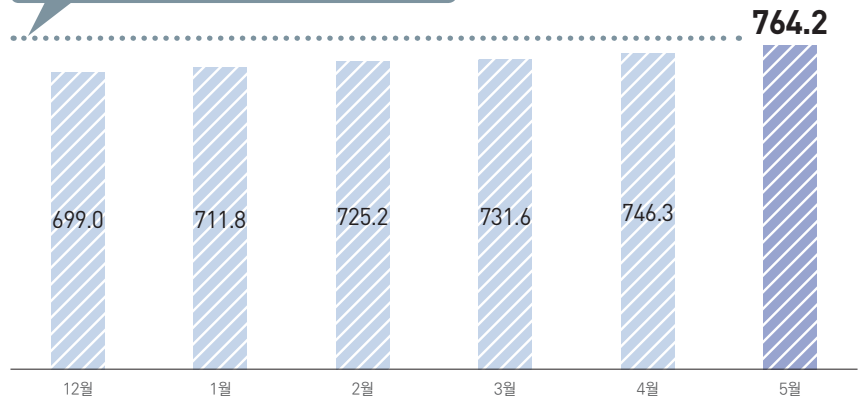
## 국가채무

• 2020년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764.2조원**

2020년 예산 기준, 중앙정부 채무 787.0조원



전월 대비

**+17.9**

조원

전년 대비

**+65.3**

조원

주 1)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로 구성. 현재 지방정부 채무 통계는 결산기준으로 연 1회 산출되므로 월별 추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공개함(2018년 국가채무는 680.5조원이며, 그중 지방정부 채무는 32.7조원임)  
2) 2020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http://www.openfiscaldata.go.kr))



주 1) 중앙정부 채무 기준

2)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3) 누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http://www.openfiscaldata.go.kr))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http://www.openfiscaldata.go.kr))」은 정부의 예산, 집행, 결산에 대한 재정통계 및 시각화 자료와 재정 관련 보고서, 간행물 등 다양한 재정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종합 재정정보공개 플랫폼입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재정통계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전규식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gsjeon@kpfis.or.kr](mailto:gsjeon@kpfis.or.kr))

### 결산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동안 확정된 정부의 세입과 세출 결과를 의미합니다. 이번호에서는 결산에 대한 정보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1 정의·웹툰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교실 > 회계결산 > 국가결산제도 개요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웹툰 > 국가결산제도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교실 > 회계결산 > 국가결산제도 개요에서는 국가결산제도에 대한 정의, 결산보고서의 구성, 국회 심의 절차 등을 도표와 함께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웹툰 > 국가결산제도 에서는 국가결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웹툰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가결산제도 개요

발생주의 · 복식부기회계제도

#### ■ 국가결산제도 개요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 확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집행한다. 집행 결과는 감사원 결산감사, 국회 결산심의 등을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환류된다. 결산은 당해 회계연도 정부의 세입과 세출 결과를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결산 결과는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집행의 적법성을 검증받으며, 예산 당국은 결산 결과를 포함한 집행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활용한다. 또한, 결산심사 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나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 요구를 하고, 정부나 해당기관은 시정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결산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작성한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 · 세출 결산을 집계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4월 10일까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한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검사와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정부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결산보고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로 구성된다.



<결산보고서의 구성>

국회의 결산심의 절차는 예산과 마찬가지로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다.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이 개정되어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성과보고서,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재무제표가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의 결산심사는 종전의 집행실적점검 위주에서 성과보고서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성과중심의 심사로 전환되고 있다.

한편, 결산 결과 세입이 세출보다 많으면 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결산상 잉여금이라고 한다. 국가재정법에서는 매 회계연도 세입 · 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계잉여금이라 정의하고 있다.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부세 · 교부금 정산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음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국가채무를 상환하며, 남은 금액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국가결산제도



## 2 부처별 결산현황

### 알기 쉬운 재정 > 테마통계 > 비용의 성격별 분류 > 부처별 성격별 결산현황

알기 쉬운 재정> 테마통계 > 비용의 성격별 분류 > 부처별 성격별 결산현황에서는 부처별 결산 현황 그래프와 각 부처별 성격별 결산 정보를 파이차트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부처별 결산 현황에서는 결산액이 높은 순위 또는 낮은 순위 순으로, 상위 10 ~ 상위 30개 부처를 선택·조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다 상세한 정보 조회를 원하는 부처의 막대그래프를 클릭하면 우측에 해당 부처의 성격별 지출현황 파이차트와 함께 아래 통계표에서 각 성격별 결산현황 추이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 3 데이터 및 문서 자료

상세재정통계DB > 결산 > 데이터자료 >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현황 등 33개의 데이터 자료  
상세재정통계DB > 결산 > 문서 자료 > 국가결산보고서 등 12개의 문서 자료

상세재정통계DB에서는 결산 관련 각종 데이터 및 문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세재정통계DB > 결산 > 데이터자료에서는 결산과 관련된 세입/세출,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부담금운용현황, 국가채권현황 등 총 33개의 데이터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재정통계DB > 결산 > 문서 자료에서는 결산보고서, 재정증권 발행계획과 같은 12건의 문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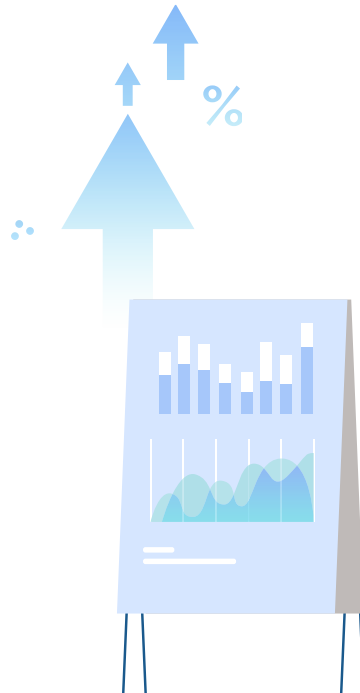
| 재정데이터명                                                          | 서비스 유형         | 공표 시기 | 생산 기관          |
|-----------------------------------------------------------------|----------------|-------|----------------|
|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br>국가통합 중앙관리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서 정보입니다. (2007회계년도부터) | SHEET Open API | 연간    | 기획재정부<br>재정관리국 |
| 세입/수입 결산 현황<br>정부의 수입/수입에 관한 결산정보입니다.                           | SHEET Open API | 연간    | 기획재정부<br>재정관리국 |
| 세출/지출 결산 현황<br>정부의 세출/지출에 관한 결산정보입니다.                           | SHEET Open API | 연간    | 기획재정부<br>재정관리국 |
|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br>중앙정부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서 정보입니다. (2007회계년도부터)   | SHEET Open API | 연간    | 기획재정부<br>재정관리국 |
| 회계별 세입 결산 현황<br>국가통합 회계별 세입결산보고서 정보입니다. (2007회계년도부터 조회가능)       | SHEET Open API | 연간    | 기획재정부<br>재정관리국 |
| 회계별 세출 결산 현황<br>국가통합 회계별 세출결산보고서 정보입니다. (2007회계년도부터 조회가능)       | SHEET Open API | 연간    | 기획재정부<br>재정관리국 |

| 재정데이터명                                                   | 서비스 유형 | 공표 시기 | 생산 기관          |
|----------------------------------------------------------|--------|-------|----------------|
| 국가결산보고서<br>국가결산보고서에 관한 정보입니다. 본 파일 자료는 결산 정보로, 매년 6월경 전- | FILE   | 연간    | 기획재정부<br>재정관리국 |
| 중앙관리별 결산보고서<br>중앙관리별 결산보고서 정보입니다.                        | FILE   | 연간    | 기획재정부<br>재정관리국 |
| 중앙관리별 성과보고서<br>성과의 후진제도는 예산의 투입을 정부의 기능이나 사업/활동/성과 등과 연- | FILE   | 연간    | 기획재정부<br>재정관리국 |
| 국가채무관리보고서<br>국가채무관리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국가채무의 범위와 구성에 따라      | FILE   | 연간    | 기획재정부<br>재정관리국 |
| 채권현세충당계산서<br>채권현세충당계산서에 관한 정보입니다.                        | FILE   | 연간    | 기획재정부<br>국고국   |



##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자료 |                   | 문서 자료 |                            |
|--------|-------------------|-------|----------------------------|
| 1      |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현황    | 1     | 국가결산보고서                    |
| 2      | 세입/수입 결산현황        | 2     |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                |
| 3      | 세출/지출 결산현황        | 3     | 중앙관서별 성과보고서                |
| 4      |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현황    | 4     | 국가채무관리보고서                  |
| 5      | 회계별 세입 결산현황       | 5     | 채권현재액총계산서                  |
| 6      | 회계별 세출 결산현황       | 6     |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
| 7      |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현황    | 7     | 물품관리운용보고서                  |
| 8      | 세계잉여금             | 8     | 기금재무제표                     |
| 9      | 재정상태표             | 9     | 정부기업특별회계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재무제표 |
| 10     | 재정운영표             | 10    | 결산개요                       |
| 11     | 순자산변동표            | 11    | 기타 결산관련문서                  |
| 12     | 소관별 재정상태표         | 12    | 재정증권 발행 계획                 |
| 13     | 소관별 재정운영표         |       |                            |
| 14     | 소관별 순자산변동표        |       |                            |
| 15     | 회계·기금별 재정상태표      |       |                            |
| 16     | 회계·기금별 재정운영표      |       |                            |
| 17     | 회계·기금별 순자산변동표     |       |                            |
| 18     | 부담금 운용현황          |       |                            |
| 19     | 국가채권현황            |       |                            |
| 20     | 국가채권추이            |       |                            |
| 21     | 회계·기금별 국가채권현황     |       |                            |
| 22     | 채권현재액명세서          |       |                            |
| 23     | 정부출자현황            |       |                            |
| 24     | 중부출자기관 정부배당현황     |       |                            |
| 25     | 연기금투자물 수탁규모(분기별)  |       |                            |
| 26     | 연기금투자물 기간수익률(분기별) |       |                            |
| 27     | 연기금투자물 수탁규모       |       |                            |
| 28     | 연기금투자물 기간수익률      |       |                            |
| 29     |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총괄  |       |                            |
| 30     | 국유재산현황            |       |                            |
| 31     | 국유지현황             |       |                            |
| 32     | e나라재산 바로가기        |       |                            |
| 33     | 재정증권 발행 및 상환내역    |       |                            |



#### 4 —————

### 결산 관련 정부정책

#### 결산 관련 보도자료 →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

결산 관련 정부의 정책을 보고 싶은 경우,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에서 '결산'을 검색하면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2019회계연도 찾아가는 국가결산교육 실시' 등과 같은 총 87건의 결산 관련 보도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총 87건

| 제목                              | 첨부                                                                                  | 담당부서  | 등록일자       | 조회 |
|---------------------------------|-------------------------------------------------------------------------------------|-------|------------|----|
|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    | 회계결산과 | 2020-04-07 | 6  |
| 결산요청 제도홍사, 청원비리 적법기관 2018년도 ... |    | 평가분석과 | 2019-12-04 | 23 |
| 2019회계연도 찾아가는 국가결산교육 실시         |    | 회계결산과 | 2019-11-11 | 28 |
|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    | 회계결산과 | 2019-05-31 | 56 |
|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   | 회계결산과 | 2019-04-02 | 20 |
|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순회교육 실시           |  | 회계결산과 | 2018-11-12 | 16 |
|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  | 회계결산과 | 2018-03-28 | 50 |
|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  | 회계결산과 | 2017-05-31 | 53 |
|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  | 회계결산과 | 2017-04-04 | 28 |
| *재무결산 Q&A, 발간 및 배포 - 발령주의 재우... |  | 회계결산과 | 2017-02-13 | 15 |
| 기획재정부, 전국 순회 국가결산 교육 실시         |  | 회계결산과 | 2016-11-16 | 9  |
|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  | 회계결산과 | 2016-05-31 | 25 |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한 달 동안 '남북관계' 이슈 키워드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북한', '통일부', '남북관계개선' 등이 연관어로 도출되었다. 대북 전단살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과 같이 북한과의 긴장된 관계에 대한 보도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서는 남북한 화해협력 등 남북관계 관련 재정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eu@kpfis.or.kr)

이달의 이슈키워드

# 남북관계



연관어

북한

통일부

남북관계개선

개선

공동선언

남북

판문점

대북 전단살포

북미

김정은

단절

연락사무소

대응

경색

군사

1989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이 제정됨에 따라 남북한 교류·협력은 불신과 대결 구조에서 신뢰와 협력 구조로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2010년 5.24조치<sup>1</sup>, 2016년 개성공단 중단 등 많은 고비를 만났다. 그럼에도 종교·체육 및 민족 동질성 분야 등의 교류와 인도적 차원의 지원 사업은 지속해왔다.

통일부는 이러한 교류·협력뿐만 아니라, 남북대화, 통일 정책 수립, 북한정세 분석 등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 통일부 주요 사업

통일부의 주요 사업으로는 통일정책, 남북회담, 남북교류협력, 남북한 출입관리, 인도적 문제해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북한 정보 수집 및 분석, 통일교육 등이 있다.

#### 2020년 통일부 주요 사업 예산

| 주요 업무        | 프로그램          | 지출액<br>(단위: 억원) |
|--------------|---------------|-----------------|
| 통일정책         | 통일정책          | 131             |
| 남북회담         | 남북회담          | 32              |
| 남북교류협력       |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 5,584           |
| 남북한 출입관리     | 개성공단 지원       | 6               |
| 인도적 문제해결     | 인도적 문제해결      | 6,262           |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1,034           |
| 북한정보 수집 및 분석 | 북한정세 분석       | 32              |
| 통일교육         | 통일교육          | 240             |

자료: 통일부(2020), 2020년도 사업별 설명자료 재구성

#### ▶ 통일정책

‘통일정책’의 세부사업은 ‘국내통일 기반 조성’,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등이 있다. ‘국내통일 기반 조성(53억원)’은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이다. 특히, 내·외신 통일부 출입 기자단의 정확하고 균형있는 보도를 위해 간담회, 세미나 등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한다.

<sup>1</sup>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응한 2010년에 발표한 대북 제재 조치를 의미한다.

또한, 민간 및 학술단체 등 통일 활동을 지원하여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시·체험 행사 및 대중문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통일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통일부는 또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41억원)’을 통해 사회문화교류, 남북회담,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 인적교류 행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초·중·고 학생을 비롯하여 재외동포 청소년,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체험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 남북회담

‘남북회담’의 세부사업인 ‘남북회담 추진(15억원)’은 분야별 회담 추진과 남북회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을 수행한다. 분야별 회담 추진은 남북 간 현안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한다. 즉, 남북대화 관련 상황을 관리,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남북회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은 남북회담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를 목적으로, 특히 전략수립 및 운영체계 개선 등을 통해 남북회담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 ▶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의 세부사업은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DMZ 평화적 이용’ 등이 있다.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4억원)’은 분야별 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한다. 특히, 법·제도, 남북경협, 사회문화, 개발지원협력 등 분야별 협의체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관련 현안 대처능력 제고 및 정책결정의 투명성, 민주성을 강화한다. 또한, 통일부-지자체-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지자체 중심의 교류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으로는 대북 협상전략 수립, 신사업 개발·연구, 국내외 구상 추진 여건 조성사업 등을 한다. ‘DMZ 평화적 이용(127억원)’은 DMZ 국제포럼, DMZ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기반을 조성한다. DMZ 국제포럼은 지속 가능한 발전, 실질적 평화지대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하며, DMZ 통합관리체계 구축은 DMZ 내 생태·역사·문화 자원 등에 대한 남북공동 조사를 실시한다. 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문화, 관광, 보건의료 등의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 ▶ 개성공단 지원

‘개성공단 지원’의 세부사업은 ‘개성공단 운영제도화’,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운영’ 등이 있다. ‘개성공단 운영제도화(3억원)’는 개성공단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투자기업 지원을 위해 사업 총괄 기획·조정, 남북협력지구 관련 조사,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운영 등을 수행한다.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운영(4억원)’은 개성공단 운영이 재개될 경우 남북 출입경과 관련하여 원활한 통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선주파수식별(RFID<sup>2</sup>) 및 차량번호판 인식기술의 활용으로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 인도적 문제해결

‘인도적 문제해결’의 세부사업은 ‘이산가족교류 지원’, ‘민생협력 지원’ 등이 있다. ‘이산가족교류 지원(281억원)’은 이산가족교류사업의 지원·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이산가족 면회소는 면회뿐 아니라 대북 협상 창구의 역할도 한다. ‘민생협력 지원(4,511억원)’은 북한의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미래통일세대 인적자원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농축산 협력, 보건의료 분야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민족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의 세부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327억원)’은 북한 이탈주민의 초기정착 및 생활 안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취업·창업 등 지역사회의 정착을 지원하며 정착금, 주거 등으로 자립·자활을 지원한다. 또한, 남북한 주민 상호인식 및 통합제고, 북한이탈주민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 ▶ 북한정세 분석

‘북한정세 분석’의 세부사업은 ‘정세 분석 역량강화’, ‘북한자료센터 운영’ 등이 있다. ‘정세 분석 역량강화(16억원)’는 북한 정보 관련 네트워크를 통해 적시성 및 정확성 있는 분석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정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지원하는 북한공개정보센터 및 정보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분절·산재된 북한 동향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및 분석하여 정세 판단을 위한 데이터 기반을 개발한다. ‘북한자료센터 운영(4억원)’은 북한 관련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축적·관리하여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북한자료 공개 확대로 국민의 자료 접근성을 높여 북한 실상의 이해도를 제고한다.

### ▶ 통일교육

‘통일교육’의 세부사업은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학교 통일교육 강화’ 등이 있다.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39억원)’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통일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통일교육의 심화 확대,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한다. 또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북한관을 제고한다. ‘학교 통일교육 강화(63억원)’는 초·중·고 학교 통일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통일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통일 의식을 제고한다. 또한, 대학생들을 위한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지정하여 통일 미래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한다.



2.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줄임말로 무선 주파수를 통해 물건이나 사람 등을 식별하는 기술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는 37개<sup>1</sup> 회원국과 주요국의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2년간을 전망한 경제 전망보고서 「OECD Economic Outlook」을 매년 두 차례 발표한다. 이번호에서는 지난 6월 10일(No. 107) 발표된 경제전망보고서의 2020~2021년 전망에 관한 주요 내용과 정책 권고 사항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김상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sgkim@kpfis.or.kr)

지난 3월에 발표된 OECD 경제 전망 이후, 코로나19가 세계적인 팬데믹<sup>2</sup>으로 이어졌다. 각국은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를 줄이고 보건·방역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통제하였다. 하지만 백신 개발·보급의 장기화에 따라 OECD는 지난 발표 대비 성장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하며, 코로나19 이후의 경기 회복을 위한 통화·금융·재정 정책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 세계 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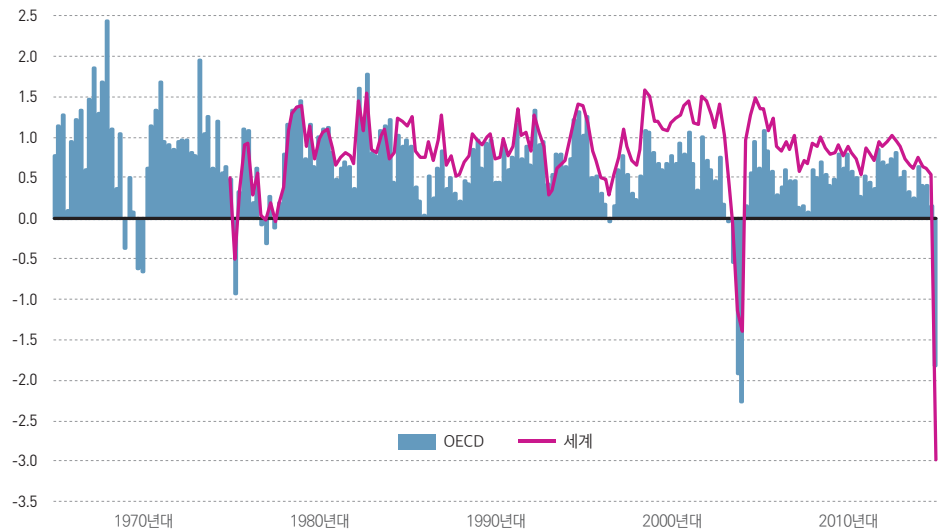
OECD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은 위축되었고 경제 전망은 전례가 없는 불확실성을 보인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국가가 봉쇄 조치를 통해 바이러스의 확산과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는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2019년 4분기 대비 2020년 2분기 OECD 국가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이하 GDP)이 14.7% 감소하는 등 1930년 경제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OECD는 현재 경기국면이 각 국가의 봉쇄 조치의 강도와 기간 등 여러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만큼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에 따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OECD 주요 재정·경제 전망

# 「OECD Economic Outlook」

그림. 세계 경제 성장률 추이

(단위: %)



주: 전 분기 대비 GDP 변화율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No. 107), 2020.6.10.

첫 번째는 올해 10월 또는 11월경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발생하여 봉쇄·방역 조치를 재개한다는 Double-Hit 시나리오로, 세계 GDP 성장률을 2020년 -7.6%, 2021년 2.8%로 전망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차단하였다는 Single-Hit 시나리오로, 세계 GDP 성장률을 2020년 -6.0%, 2021년 5.2%로 전망했다. 두 시나리오 모두 2020년에는 모든 국가가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2021년에는 점진적인 경기 회복을 기대했다. 다만, 노동시장은 2021년에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4분기 OECD 평균 실업률은 Double-Hit 시나리오 12.6%, Single-Hit 시나리오 9.4%로 최고점을 찍으며,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2021년 4분기 실업률은 각각 8.9%, 7.7%로 2019년 4분기 실업률(5.3%)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했다.

봉쇄 조치의 강도와 기간에 따라 주요 선진국 간의 경제 전망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OECD는 비교적 오랫동안 엄격한 봉쇄 조치를 시행한 유로존 국가들이 특히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OECD에 가입한 유로존 국가들의 2020년 GDP는 2019년보다 Double-Hit 시나리오에서 11.5%, Single-Hit 시나리오에서 9.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1. 2020년 콜롬비아가 가입하여 OECD 회원국은 총 37개국으로 확대되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6단계를 일컫는 말로, 새로운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표. 세계 경제 전망

(단위: %)

| 구분           | 2018년 | 2019년 | Double-Hit |       | Single-Hit |       |
|--------------|-------|-------|------------|-------|------------|-------|
|              |       |       | 2020년      | 2021년 | 2020년      | 2021년 |
| 실질 GDP 성장률   |       |       |            |       |            |       |
| 세계           | 3.4   | 2.7   | -7.6       | 2.8   | -6.0       | 5.2   |
| G20          | 3.6   | 2.9   | -7.3       | 3.1   | -5.7       | 5.5   |
| OECD         | 2.3   | 1.7   | -9.3       | 2.2   | -7.5       | 4.8   |
| 한국           | 2.9   | 2.0   | -2.5       | 1.4   | -1.2       | 3.1   |
| 미국           | 2.9   | 2.3   | -8.5       | 1.9   | -7.3       | 4.1   |
| 유로존          | 1.9   | 1.3   | -11.5      | 3.5   | -9.1       | 6.5   |
| 일본           | 0.3   | 0.7   | -7.3       | -0.5  | -6.0       | 2.1   |
| 비 OECD       | 4.4   | 3.5   | -6.1       | 3.2   | -4.6       | 5.6   |
| 중국           | 6.7   | 6.1   | -3.7       | 4.5   | -2.6       | 6.8   |
| 인도           | 6.1   | 4.2   | -7.3       | 8.1   | -3.7       | 7.9   |
| 브라질          | 1.3   | 1.1   | -9.1       | 2.4   | -7.4       | 4.2   |
| 실업률          | 5.5   | 5.4   | 10.0       | 9.9   | 9.2        | 8.1   |
| 인플레이션        | 2.4   | 1.9   | 1.1        | 1.0   | 1.1        | 1.3   |
| 재정수지(GDP 대비) | -2.9  | -3.3  | -12.7      | -9.2  | -11.1      | -7.1  |
| 세계 실질 무역성장률  | 3.9   | 1.1   | -11.4      | 2.5   | -9.5       | 6.0   |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No. 107), 2020.6.10.

OECD는 코로나19가 남긴 경제적 상처가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의 주요 요인으로서는 저성장의 고착화,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높은 부채 비율, 기업도산 위험에 따른 금융 불안, 글로벌 교역량 감소를 꼽았다.

OECD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질임금, 생산투자,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 경제가 뒷걸음치는 등 저성장 구조가 고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생산투자의 장기적인 감소는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져, 영구적인 일자리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Double-Hit 시나리오 기준, 2020년 GDP 대비 OECD 중위(Median OECD Economy) 생산투자 비율은 2019년 대비 2.73%p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며, 2020년 1인당 OECD 중위 실질임금은 2019년 대비 10% 가량 낮아진 2011년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OECD는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높은 무역 의존도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증가하고 있는 부채비율과 통화 가치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거시경제 정책 완화의 여지가 제한된 점도 위험요인으로 판단했다. 또한, 기업 수익의 급격한 감소로 채무 불이행 위험 가능성이 신용도 하락 등의 금융시장 불안요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고, 글로벌 교역량의 감소로 인한 경제 효율성 감소도 경제적 상처를 지속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봉쇄·방역 조치를 시행한 주목할만한 국가로 지목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2020년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Double-Hit 시나리오 -2.5%, Single-Hit 시나리오 -1.2%로 전망했다. 이는 OECD가 2020년 3월<sup>3</sup>에 전망한 2020년 전망치(2.0%)보다 Double-Hit 시나리오 4.5%p, Single-Hit 시나리오 3.2%p 낮은 수준이지만,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수준이다.



### 정책적 권고 사항

OECD는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봉쇄 조치를 유지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원의 재분배와 소득지원을 통한 노동자와 기업의 안정화 정책을 권고했다. 특히, 광범위한 재정·통화·금융 정책과 함께, 경제활동의 제약 정도, 회복 기간 등을 고려한 유연하고 민첩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정책으로는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보건 역량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진단검사, 동선 확보와 추적, 치료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봉쇄 조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검사 능력이 필수 조건이라고 말하며, 다른 중환자와의 격리·치료 등을 위한 중환자실(ICUs: Intensive Care Units)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리고 개인방역물품(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확보 또한 바이러스의 전염을 줄여 봉쇄 조치 완화 및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완화적인 통화·금융정책을 지속하며, 중앙은행의 적극적 역할도 강조했다. OECD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금융시장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적시적인 조치가 금융시장의 붕괴 위험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유지되어온 낮은 금리와 기업의 높은 부채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2차 유행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저금리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정책의 유지를 지지했다.

봉쇄 조치 동안의 재정정책으로는, 경제활동 제약으로 인한 가계소득을 보전하고 기업의 파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시적인 재정집행을 요구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재유행 시에는 추가적인 확대 재정정책을 주문하며, 장기적으로는 높은 공공부채에 대응하기 위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의료·공공지출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경제 성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역과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대한 투자 확대, 그리고 거시경제 여건이 취약한 신흥국에게는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권고 사항도 있다. 상당한 규모의 공공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투자와 일자리 회복을 앞당길 한국판 뉴딜 정책을 지지했다. 다만, 소득 감소로 민간소비가 위축되었으며,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실업자 수가 증가하였다고 봤다. 이에 노동 재분배를 위한 직업훈련 확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가계지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등도 권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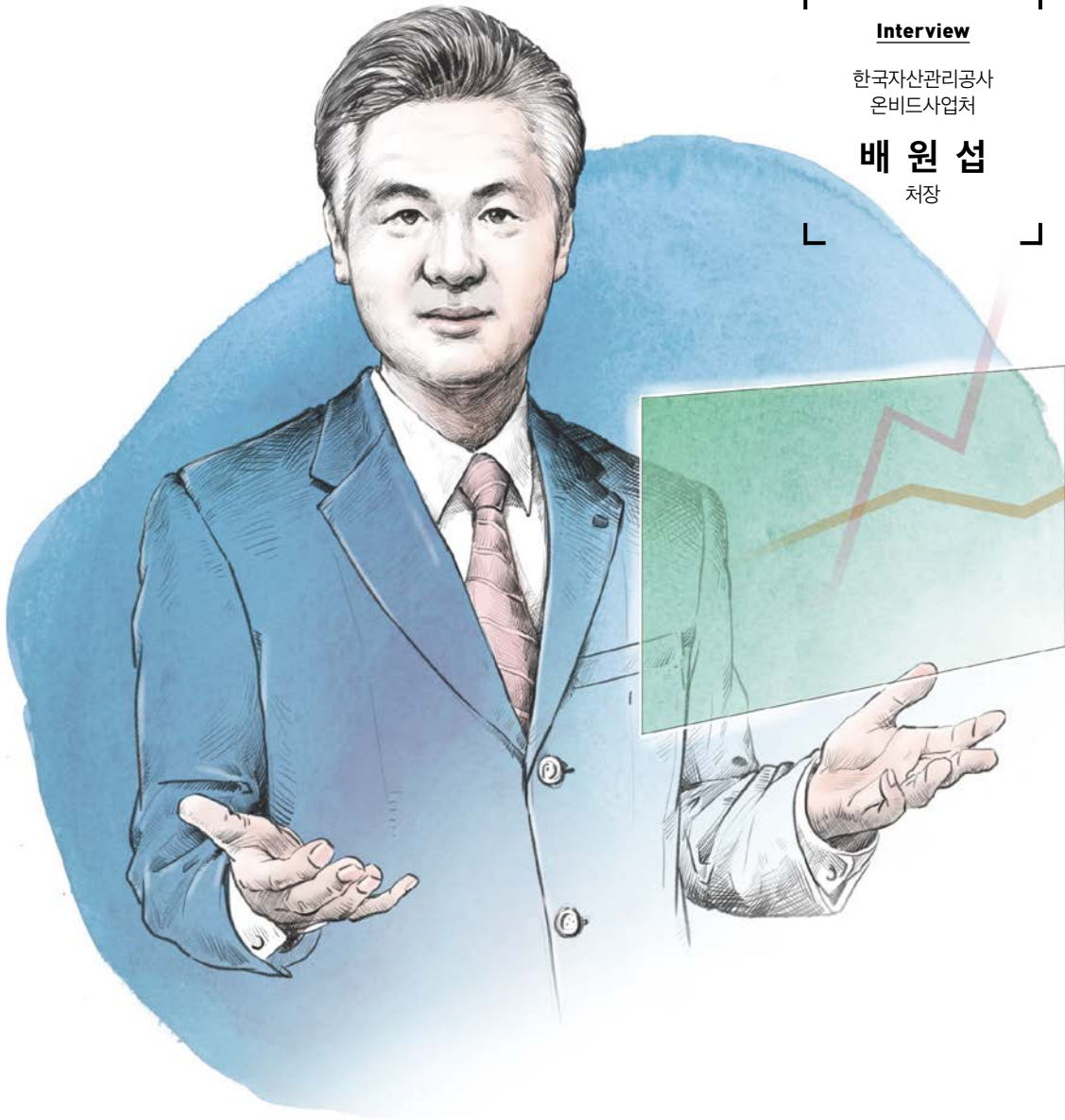
3 OECD, 'OECD Interim Economic Assessment: Coronavirus The World Economy at Risk'(No. 106), 2019.3.2.

Interview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사업처

배원섭

처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은 자산 매각·임대 등 다양한 공매를 통해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온비드' 시스템은 이러한 공매의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공매 시스템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사업처 배원섭 처장을 만나 온비드에 대해 알아보자.

담당. 김상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sgkim@kpfis.or.kr) 글. 정재림 일러스트. 강태이



#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

## 공매 과정의 진입 장벽을 낮추다

‘온비드’는 Oline Bidding System의 줄임말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운영하는 온라인 공매 시스템을 말한다. 과거에는 캠코 강당에서 지정된 날짜에 현장입찰 방식으로 공매가 진행됐다. 하지만 입찰 참여자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캠코는 아이디어 회의를 바탕으로 ‘공매를 입찰 현장이 아닌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이끌어냈다. ‘온비드’ 서비스가 개시된 것이다.

“과거에는 전자상거래가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또 온라인을 통한 금융거래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크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온비드사업처에서 온비드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배원섭 처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입찰 참여와 공매보증금 입금, 낙찰, 유찰 등 다양한 절차의 시범테스트를 거쳐 온비드 출시에 성공했습니다.”

입찰을 위해 직접 법원을 방문해야하는 경매와 달리 온비드 공매는 PC([www.onbid.co.kr](http://www.onbid.co.kr)) 또는 휴대폰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고 다양한 물건을 취득할 수 있다. 2002년에 개시된 온비드 서비스는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재산, 행정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국·공유재산, 공공기관·지자체 등이 자체 매각하는 부동산·자동차·기계장치 같은 다양한 자산을 매각·임대하고 있다.

“캠코 온비드사업처는 공공부문의 자산 매각과 임대 등 다양한 공매 정보를 온비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 계약, 등기 등 관련 절차를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요.”

이러한 노력으로 온비드는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거래금액 80조원을 넘기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물건을 검색하고 취득할 수 있어 거래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뿐 아니라, 거래에 투명성이 높고 접근성이 용이해 호응을 얻었다.

## 다양한 공매물건이 거래되는 온라인 만물상

온비드는 공매물건 검색부터 입찰 참가, 입찰 진행, 계약 체결까지 입찰 절차의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국유재산을 포함한 1.9만여 공공기관·지자체 등의 자산처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온비드에서는 아파트, 토지, 상가 등 부동산부터 자동차, 귀금속, 미술품 등 동산까지 다양한 종류가 거래되고 있어 온라인 만물상으로 통합니다.”

실제 거래된 매물 중 2014년 한국전력의 삼성동 옛 본사 용지를 10조 5,500억원에 현대·기아차그룹에서 낙찰받았고 이외에도 단원 김홍도의 인물화, 헬리콥터, 지하철 광고 임대권, 학교 매점 임대권 등 다양한 물건들이 거래되었다.

“온비드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비드 앱에 회원 가입 후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비드 사이트에 등록만 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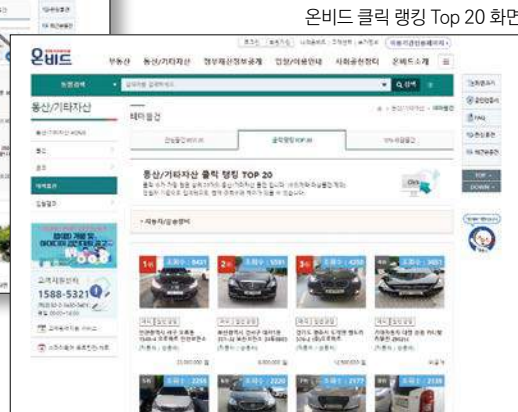
입찰 이후 계약·등기 등 관련 절차 역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용도와 지역, 최저입찰가 등 조건검색을 통해 원하는 물건을 찾아볼 수 있으며 ‘관심물건 BEST 20’이나 ‘클릭 랭킹 TOP 20’ 등의 서비스를 활용해 다른 투자자들이 관심을 찾는 물건도 알아볼 수 있다.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매 물건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온비드를 활용하면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처분하는 물건의 거래와 적정 가격 매각을 도와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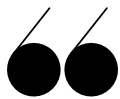




온비드 관심물건 BEST 20 화면



온비드 클릭 랭킹 Top 20 화면



온비드는 공매물건 검색부터 입찰 참가, 입찰 진행, 계약 체결까지 입찰 절차의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국유재산을 포함한 1.9만여 공공기관·지자체 등의 자산처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 언택트 트렌드를 이끌어가다

온비드는 코로나19에 따라 언택트(비대면·비접촉)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꾸준히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법원 휴정이 장기화되면서 경매 입찰기일이 연기됐던 것과는 반대로 온비드 공매 시스템은 올해 상반기까지 약 43만건이 낙찰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올해 4월에는 온비드 24시간 온라인 상담챗봇(Chatbot) ‘온다비’도 선보였다. 7월 말에는 스마트온비드 앱 리뉴얼을 앞두고 있어 꾸준히 서비스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캠코는 온비드 시스템을 활용해 국유재산을 대부·매각하여 매년 1조원 이상을 국고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비드를 통해 국·공유재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분하여 국가재정수입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배원섭 처장은 고객들이 안심하고 공공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며 온비드 시스템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했다.

# 추가경정예산은 언제 편성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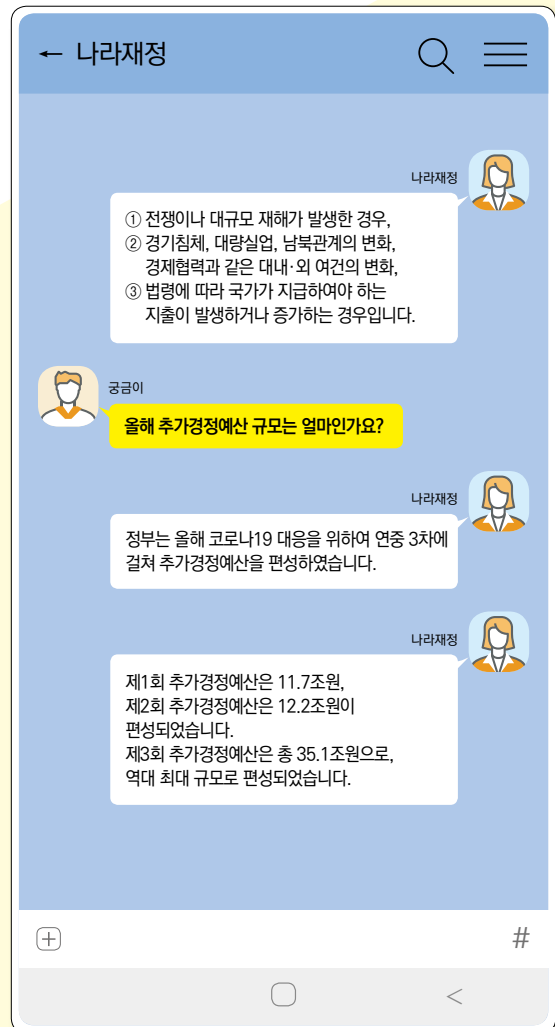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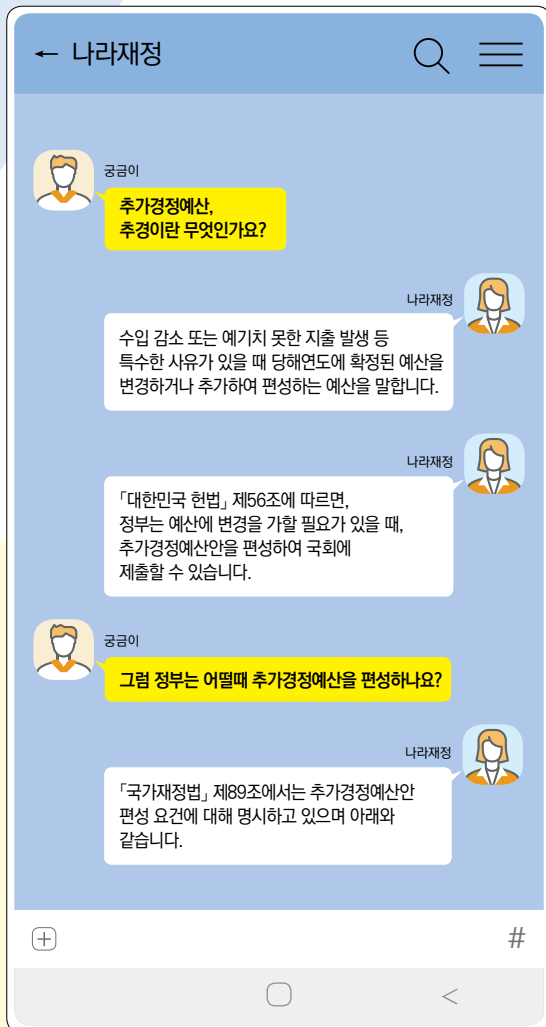
조현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hyunheecho@kpfis.or.kr)

지난 7월 3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972년 이후 48년만에 처음으로 연중 3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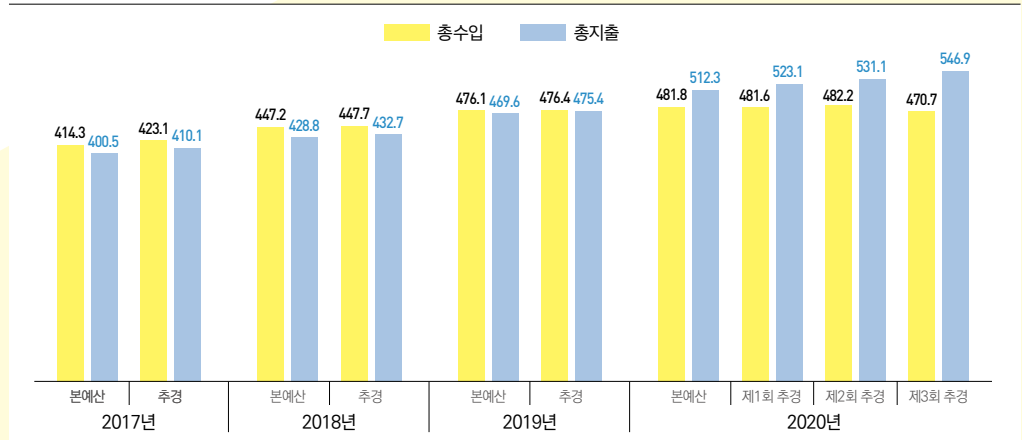
추경이 편성되며 추가경정예산, 추경이라는 단어가 신문 등 매체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이 무엇이며, 언제 편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연도별 본예산·추가경정예산 추이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재구성

개인이 월급을 받아서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정부도 매년 말이면 다음 해의 수입·지출 계획, 즉 예산을 확정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된 뒤, 수입이 줄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정부는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집행합니다. 이를 추가경정예산, 줄여서 추경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6조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는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으며 그 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령에 따

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발행하기도 하고,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특별회계 등을 활용합니다. 또한 이미 지출하기로 했던 사업을 일부 축소 조정하거나 당해연도에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를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48년만에 처음으로 연중 3차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1.7조원으로 주로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과 방역체계 보강·고도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긴급재난금 지원을 목적으로 12.2조원이 편성되었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경정, 금융패키지 지원, 고용대책 뒷받침, 경기보강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투자 등을 목적으로 35.1조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 James McNeill Whistler



James McNeill Whistler, <Arrangements in Grey and Black: Portrait of Painter's Mother>, 1871, Oil on Canvas, 1,443 × 1,624mm, Musee d'Orsey, Paris

## 제임스 휘슬러와 어머니의 교육열

글. 최병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경제학자의 미술관』 저자

제임스 맥닐 휘슬러(James McNeill Whistler, 1834~1903)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1855년에 유럽으로 건너가 파리와 런던에서 활동한 화가다. 휘슬러의 그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영화 <미스터 빈(Mr. Bean)>에서 주인공 로완 앳킨슨(Rowan Atkinson)이 덧칠하다가 오히려 망쳐놓은 그림, <회색과 흑색의 배치 1번: 어머니의 초상(Arrangements in Grey and Black: Portrait of Painter's Mother)>일 것이다. 이 작품은 영국이나 미국에 소장되어있지 않고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Musee d'Orsey)에 걸려있다. 이 작품의 진가를 알아본 프랑스 정부가 구입하여 오르세에 소장한 것이다. 영화 <미스터 빈>이 나온 이후에 이 작품은 오르세 미술관에서도 아주 인기 있는 그림이 되었다. 제임스 휘슬러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출신으로 기관차 엔지니어였던 아버지가 러시아 철도사업에 관여하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주하여 어린 시절을 보냈다. 교육에 열정적이었던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경제적, 문화적으로 앞섰던 런던과 파리 같은 대도시로 체류하며 선진 문물을 보여줬다. 조기 체험교육을 중시했던 어머니의 열성 때문이었다. 당시 파리에는 인상파 화풍이 유행했는데,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어린 휘슬러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다. 또한 휘슬러는 근대산업과 교역이 부흥하던 런던에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고 나중에 그가 런던에 정착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쳤다.

교육은 개인적으로는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축적하는 수단이고, 사회적으로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계층의 상승을 가능케 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자녀교육에 열성을 보이는 어머니들의 노력은 대단했다. 오죽하면 맹자의 어머니는 어린 자식의 교육을 위하여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세 번이나 했다는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 같은 고사(故事)가 생기지 않았는가?



사람들은 어머니의 소박한 드레스와  
늙고 야윈 모습에서 드러나는  
쓸쓸함을 통해 사실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교육에 대한 열의로 휘슬러는 예술가의 꿈을 키웠으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그의 가족은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신앙심이 깊었던 그의 어머니는 휘슬러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를 교회 부속학교에 보냈다. 하지만 곧 아들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휘슬러의 부친이 졸업한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 진학을 권했다. 어머니의 희망에 따라 웨스트포인트에 진학했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졸업하지 못했다. 어린 시절의 꿈을 좇아 화가가 되리라 결심한 휘슬러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림 공부를 위해서 파리로 향했다.

휘슬러는 파리와 런던을 오가며 그림을 그리는 자유분방한 보헤미안과 같은 생활을 했다. 파리에서는 드가와 교류하게 되었고, 마네로부터 화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 살롱전에 작품을 출품했으나 낙선했고, 1863년에 다시 야심작 〈흰옷 입은 소녀(Symphony in White No.1: The White Girl)〉로 살롱전에 참가했으나 또다시 낙선하고 만다. 그는 당시 인상파 화가들과 달리 의도적으로 심포니, 혹은 녹턴같은 음악적인 제목에 형태와 색채의 조화만을 보여주는 작품을 시도했으며, 당시 인상주의 화파에서 다들 금기시하는 흰색을 주조로 하여 그림을 그렸다. 또한 필요 없는 세부묘사를 과감히 생략하고 무채색이나 단순한 색채로 전체적인 조화를 중요시했다. 그의 이러한 미적 감각은 그의 초상화 작품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휘슬러는 정작 파리에서 작가로서의 명성은 쌓을 수가 없었다. 그는 미련 없이 파리를 떠나 런던에 정착하게 된다. 예술의 수도인 파리에서 예술가로서 성공하기를 바랐던 그의 바람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의 어머니는 런던으로 아들을 찾아왔다. 어떻게 해서든 아들이 화가로 이름을 날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녀는 자신이 직접 그림의 모델이 되기를 자청했던 것이다. 아들의 성공을 위한 어머니의 열망은 실제로 그녀의 소원대로 이루어졌다. 휘슬러의 많은 작품 중에 우리에게 지금까지 잘 알려진 그림은 오직 그의 어머니를 그린 이 작품뿐이다!

1872년에 그린 이 초상화는 〈휘슬러의 어머니(Whistler's Mother)〉로도 알려져 있다. 원제목은 〈회색과 흑색의 배치 1번(Arrangement in Grey and Black No 1)〉이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제목보다는 〈화가의 어머니〉 또는 〈휘슬러의 어머니〉로 더 익숙하다. 그런데 휘슬러는 자신의 어머니 초상을 그리고는 이 작품의 제목에 어머니라는 말을 넣지 않고 희한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제목을 붙여놓았다. 어쩌면 모델까지 해주었던 어머니의 지나친 관심에서 오히려 멀어지려는 심리가 작용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림 속 어머니의 모습은 인자하고 자애로운 모습이 아니고 웬지 차갑고 근엄한 모습이다. 게다가 정면도 아니고 측면 모습의 어머니는 성경 위에 손을 단정하게 얹고 의자에 앉아 있다. 실내는 무채색 계통의 단조로운 색감이 주조를 이루며, 방의 구도 역시 낡은 마루 위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어 수도원 방과 같이 단출하다. 이 그림에서 벽의 색감인 회색과 어머니의 의복의 검은 색의 섬세한 조화는 그림의 전체적인 안정감과 균형을 유지해준다. 사람들은 어머니의 소박한 드레스와 늙고 야윈 모습에서 드러나는 쓸쓸함을 통해 온화하고 자애로운 어머니상(像)보다 더 사실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고, 이 그림은 휘슬러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되었다. 이 작품에서 사람들이 본 것은 색과 구도의 조화가 아니라 ‘어머니’였던 것이다.

미국 정부는 1934년 어머니의 날을 맞아 기념 우표를 발행하면서 이 작품을 디자인으로 사용하여 휘슬러의 어머니를 미국의 어머니 상으로 상징하여 기념했다. 그러나 휘슬러는 1903년 죽을 때까지 런던에서 주로 지내며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아들의 교육에 열정과 정성을 쏟았던 휘슬러의 어머니는 자신을 모델로 한 그림으로 예술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된 아들에게 만족했을까?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의 어머니들 모두 그리 하듯이 자식을 위해서는 불가능이란 없다. 어머니는 강하다!



# 부르주아 자본론의 개척자 뵘바베르크

글.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누구나 이자를 궁금해한다. 왜 이자가 생겨날까? 이자는 착취의 산물인가? 금융을 이용하는 대가인가? 경제학계 일각의 주장처럼 저축이 투자보다 많기 때문에 등장하는 현상이라는 마이너스 금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경제사상사를 보면 이러한 문제가 경제학 초미의 이슈였다.

이자현상을 가장 설득력이 있고 체계적으로 설명한 인물은 바로 오스트리아 출신 정치경제학자 오이겐 폰 뵘바베르크(Eugen von Böhm-Bawerk, 1851~1914)다. 그가 이자현상을 중심으로 자본론을 개발했던 시기의 시대적 배경은 마르크스의 사상이 대중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한 때였다. 그의 사상은 이윤과 이자의 존재를 부정했고 자본주의는 착취로 점철된 부정한 사회라는 논리를 펼쳤다.

### 마이너스 이자는 존재할 수 없다

아버지가 고위 공무원이었던 가정의 막내아들로 태어난 뵘바베르크는 원래 법학을 전공했다. 하지만 그의 스승의 말에 따라 법학을 접고 독학으로 경제학에 입문했다. 그의 탁월한 업적은 ‘이란 시간선호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라는 발견이었다. 시간선호란 사람들이 동일한 품질의 자동차라고 해도 장래에 갖게 될 자동차보다 지금 갖는 자동차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처럼 현재재화를 미래재화보다 높이 평가한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려면 그 평가 차이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이 부여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이자라는 것이다. 이자가 결코 음이 아닌 양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재화를 미래재화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의 사고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강제가 없는 한 마이너스 이자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최근 스위스(-0.75%), 덴마크(-0.75%), 스웨덴(-0.35%) 등의 마이너스 금리는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에 의한 것이다.



*Eugen von Böhm Bawerk*

(1851~1914)



그가 이자현상을 중심으로 자본론을  
개발했던 시기의 시대적 배경은

마르크스의 사상이 대중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한 때였다.

그의 사상은 이윤과 이자의 존재를  
부정했고 자본주의는 착취로 점철된  
부정한 사회라는 논리를 펼쳤다.



### 이자 는 돈의 가격이 아닌 시간의 가격

뵘바베르크는 이자가 돈의 가격이 아니라 시간의  
가격이라고 인식했다. 이자를 금융투자에 대한  
수익, 자본재 사용에서 생기는 소득이라는 전통  
적인 시각은 틀렸다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이자  
지불을 위한 기금일 뿐이라고 보았다.

이자의 존재 이유가 시간선택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자 를 착취라고 말하는 것도 당치않다고 뵘  
바베르크는 주장한다. 이자는 자본주의에서만  
등장하는 역사적·법적 범주가 아니라는 그의 주  
장은 흥미롭다. 이자현상은 현재와 미래를 상이  
하게 평가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등장하기에 체  
제와 무관한 현상이라는 그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소비 아닌 저축이 애국

뵘바베르크는 이자의 존재 때문에 자본이 형성되고 장차 더 많은 소비를 보장하는 우회생산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우회생산이란 직접 창이나 손으로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그물과 카누 등을 만들어서 더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시간 투입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이자와 자본이다. 따라서 소비가 경제성장을 부르는 게 아니라 경제성장이 소득 증대를 거쳐 소비를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뵘바베르크가 주목한 것은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는 사회다. 물론 저축 때문에 처음에는 소비 수요가 줄어들 수 있지만, 저축은 자본재 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줄어든 소비재 수요를 상쇄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발전된 국가에서는 자본의 퇴장이 없고 저축은 전부 투자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본의 증가로 이어져 소득도 증가하고 장차 소비재 수요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뵘바베르크는 소비 수요가 생산을 위한 불가분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저축은 일반적인 구매력의 감소일 뿐이므로 생산의 위축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틀렸다고 일축한다.

## 자본은 노동의 적이 아닌 친구

이러한 자본론의 시각에서 뵘바베르크가 우려한 것은 소비성 공공부채다. 소비가 중요하다는 이유에서 정부가 빚을 얻는 정부지출의 증가가 금융시장의 위축을 초래하여 번영을 방해한다는 것

이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자본이라는 게 뵘바베르크의 인식이다.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슈페터(Joseph Alois Schumpeter)가 뵘바베르크를 ‘부르주아 마르크스’라고 불렀던 것도 그가 마르크스처럼 자본을 분석의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본을 노동의 적(敵)이 아닌 친구요, 모든 계층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보편적 번영의 열쇠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뵘바베르크는 자본과 이자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 현실에 적합한 경제성장이론을 독창적으로 개발하여,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한 탁월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

## 뵘바베르크 사상의 힘

뵘바베르크는 독보적인 자본론을 기초로 하여 마르크스 사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을 유력하게 설명한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의 거성 미제스(Ludwig von Mises)와 하이에크(Friedrich Hayek)가 경기변동이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뵘바베르크 자본론의 힘 덕분이었다.

뵘바베르크는 세 번이나 재무부 장관이 되어 생산에 부담이 되는 조세를 개혁하고 금본위제를 도입해 정부부채를 줄이는 데에도 정치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에 통합될 때까지 오스트리아의 100실링 지폐에 그의 사진이 실린 것은 금융과 통화 부분에서 그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해준다.

경제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 재정·경제 신간도서



###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다!

- 학교가 실천해야 할 시민교육의 거의 모든 것

01

#### 지은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시민모임

● 교수, 교사, 교육사, 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자들로 이루어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아이들과 교실, 학교, 교육생태계와 사회구조를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기술·분석·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공동체다.

출판사 맘에드림

발간일 2020년 4월 7일

66

### 깨어 있는 시민을 기르기 위한 시민교육

2019년 12월에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우리 사회는 만 18세 선거권 하향이라는 정치·사회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자치, 학교자치, 학교 민주주의라는 교육계의 큰 변화 속에서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시민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계의 인식 확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민교육에 대한 위계와 계열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학교 안에서 어떻게 시민교육을 실천할 것인지에 연구한 내용을 담고 있다. 1부에서는 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2부에서는 다양성 시대에 시민교육을 어떻게 이뤄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3부는 학교 안에서 시민으로 참여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다룬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18세 선거권과 다문화, 젠더, 다양한 차별 및 혐오 관련 이슈 등 미디어 홍수 시대에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는 시민교육의 주제들을 한데 모았다.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며, 그러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강한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도록 이끌 수 있을까? 이같은 올바른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대한 고민을 풀어볼 수 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의 교육법에서 벗어나 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시민 감수성을 높여, 시민으로 참여하는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체계적인 교육 방향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들어가며. 민주시민교육, 학교는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PART 01. 시민교육의 필요성 “왜 학교에서 시민의식을 키워야 하나?”  
PART 02. 다양성 시대의 시민교육 “학교, 시민 감수성을 높여라”  
PART 03. 학교에서 실천하는 시민교육 “학교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라!”  
마치며. 학교, 시민교육의 장으로 거듭나야

## 대 전환기 프레임 혁명

- 포스트 코로나,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

02

지은이

박세길

- 저자 박세길은 철학을 공부하고 노동자와 한국 근현대사 인
- 식을 공유하는 역사교양 활동에 매진해왔으며, 사회단체 연
- 구기관의 오랜 현장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기존 세계를 뒤
- 어넘어 새로운 미래를 탐색하는 일까지 연구와 집필을 이어
- 가고 있다.

출판사 북바이북

발간일 2020년 7월 3일

KPFIS's  
library

## 66 새로운 사회경제 체제의 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촉발된 일명 '코로나 전쟁'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다. 코로나 전쟁은 그동안 선진국이라는 환상 속에서 미화 되었던 낡은 질서의 치부를 드러냈다. 더불어 그 반대편에서 새로운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결정적 기점들도 함께 드러내 보였다. 대전환기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촉발된 대전환기에 우리 사회 및 경제 체제가 변화할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선진국'에 대한 허상이 드러난 지금이 자본 중심의 경제에서 사람 중심의 경제로 역사의 프레임을 바꿀 때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세계사와 한국 근현대사를 오가며 자본주의 세계의 모순을 해석하고, 한국 사회의 '기저질환'을 분석해 치료법을 내놓는 한편, 새로운 경제 운영 원리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한다. 저자의 오랜 현장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 경제'라는 구성이 탁상공론이 아닌 실제로 실현 가능한 미래임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이 책은 자본주의가 지속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뒤집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혁명에 대한 매뉴얼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시대를 읽는 안목과 통찰력을 키우고 새로운 미래를 기획하는 데 도움을 얻어보자.



1. 코로나 전쟁이 던진 메시지
  2. 한국 경제 3대 기저질환
  3. 보편 기제로서 시장경제
  4. 수명이 다된 '자본 중심 경제'
  5. 진보 세계를 떠도는 과거의 망령들
  6. '사람 중심 경제'의 운영 원리
  7. 한국 의료산업의 실천적 검증
  8. 3대 메카 전략과 소프트웨어 강국
  9. 사회적 합의와 촛불세대의 역사적 임무
- [보론] 집단지성을 기초로 함께 풀어야 할 숙제들

# Financial Calendar



## □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정부, 6.1.)

- 정부는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하여 ①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 ② 세계의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③ 방역, 대외신인도, 금융, 통상 등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 ④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신속 추진 ⑤ 산업-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 추진 ⑥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 확충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발표

### January

01

- 재정**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경제** 통계청 2019년 연간 고용동향 발표
- 국제** IMF 수정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 February

02

- 재정** 2019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2019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경제** 통계청 2019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 발표

### March

03

- 재정**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각 중앙관서)
- 경제** 한국은행 2019년 4/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국제**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 July

07

### August

08

- 경제** 통계청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발표  
통계청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September

09

- 재정** 2021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2021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 경제** 한국은행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국제**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2020

#### □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 발표(세계은행, 6.9.)

- 세계은행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반영하여 세계경제성장률을 -5.2%(1월 전망 대비 -7.7%p)로 전망하였으며, 각국 봉쇄조치로 인한 수요 둔화, 국제교역량 감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선진국 -7.0%, 신흥시장개도국 -2.5% 전망

#### □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발표(OECD, 6.10.)

- OECD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불확실성(Exceptionally Uncertain)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로 발표
- 방역조치로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가정한 Single-Hit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6.0%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방역조치 재개를 가정한 Double-Hit 시나리오에서는 -7.6%로 전망

#### □ IMF 수정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IMF, 6.24.)

- IMF는 4월 전망 시 예상보다 부진한 대다수 국가의 1분기 GDP 실적과 2분기 중 보다 더 심각한 경기 위축 가능성을 반영하여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4.9%로 전망(4월 전망 대비 -1.9%p)
- 선진국의 경우, -8.0%(4월 전망 대비 -1.9%p), 신흥개도국의 경우 -3.0%(4월 전망 대비 -2.0%p)로 성장 전망을 대폭 하향조정하였으며 한국은 올해 -2.1%(4월 전망 대비 -0.9%p)의 성장을 전망

#### □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기획재정부, 7.3.)

- 정부는 ① 세입경정 ② 금융안정패키지 지원 ③ 고용안정 특별대책 뒷받침 ④ 경기보강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투자 등 4가지 목적으로, 10.1조원의 지출구조조정과 23.8조원의 국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총 35.1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April

04

- 재정** 2019년 결산감사 의뢰 (기획재정부→감사원)
- 국제**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May

05

- 재정** 2021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2019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 2019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 2019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 경제** 통계청 2019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 발표
- 통계청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June

06

- 경제** 한국은행 1/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기획재정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국제** OECD 경제전망보고서 (Economic Outlook) 발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 IMF 수정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October

10

- 재정** 국유재산/물품 결산지침 확정
- 국제**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November

11

- 재정** 2021년 예산안 국회 심의·의결
- 경제** 통계청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국제** OECD 경제전망보고서 (Economic Outlook) 발표

December

12

- 재정** 2021년 예산 확정
- 경제** 기획재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한국은행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 한국재정정보원, 코로나19 관련 세계은행과 dBrain 경험전수 온라인 세미나 개최

한국재정정보원은 6월 16일(화), 세계은행(WB)과 부탄, 베트남, 헝가리,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등 회원국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세미나를 개최하여,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dBrain)의 비상운영체계에 대한 노하우를 나눴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한 △원격지 임시사무소 구축, △보안체계가 적용된 재택근무 환경 조성, △상담센터의 분산근무,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비대면 서비스(채팅상담, 화상교육)를 제공했고, 이와 같은 경험을 전수했다. 또한, dBrain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정책당국의 재정업무를 지원한 노력도 함께 공유했다.



k p f i s news

### 한국재정정보원,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재정정보원은 6월 17일(수) 회사 인근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남산원(서울 중구 소재)을 찾아 식재료와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남산원은 1952년에 설립되어 영유아 보육, 인·적성 교육, 진학 지도 및 직업탐방 등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날 한국재정정보원은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서 경품으로 받은 '봉화 한우'를 전달해 더위에 지친 아이들에게 한 끼 식사로 대접했고, 그 밖에도 아이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건, 필기도구 등을 기부했다.



### 한국재정정보원, 아동복지시설 남산원의 '사랑의 수영장 만들기' 실천

한국재정정보원은 6월 24일(수) 사회복지법인 남산원(서울 중구 소재)을 찾아 아이들의 여름나기 수영장 개장을 도왔다. 식재료와 생활용품 등을 지원한 것에 이은 두 번째 방문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자원봉사자의 발길이 끊어진 점을 우려해 일손을 보태고자 방문한 것이다. 아울러 한국재정정보원의 주거래은행인 농협은행에서도 동참하여 아이들에게 필요한 생필품과 식재료 등을 기부했다.

# 애독자 QUIZ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퀴즈 정답과 함께 평소 재정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을  
“재정 Talk Talk”에 질문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애독자 퀴즈 정답 및 다양한 의견 보내주실 곳

【이메일】 narajaejung@kpfis.or.kr

【애독자 퀴즈 정답 응모 기간】 2020. 7. 23. ~ 2020. 8. 13.

## 문 제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저탄소·친환경 경제기반으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정책용어는 무엇일까요?

6월호  
애독자퀴즈  
당첨자 발표

☆ 퀴즈 정답

국세수입

☆ 상품 당첨자

jun\*\*\*@hanmail.net  
vvv\*\*\*\*@naver.com  
bae\*\*\*\*@hanmail.net  
lmh\*\*\*\*\*@naver.com  
kyh\*\*\*\*\*@sbculture.or.kr  
159\*\*\*\*\*@gmail.com

※ 당첨자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size)  
기프트콘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POSTCARD



이야기 잘 보았습니다. 글로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그래프와  
통계데이터를 통해 한눈에 들어오고 이해하기 쉽게  
잘 구성해 주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 많은 정보나 근거가 필요한 부분은 열린재정 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재정투명성을 신뢰하고  
더 효율적인 국가재정이 되게 하는데 많은 의견을 내시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 부분입니다.

159\*\*\*\*\*

※ 〈월간 나라재정〉의 개인구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narajaejung@kpfis.or.kr로 메일 주세요.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 재정의 밝은 내일을 위해  
재정정보화를 이끌어갑니다.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273-0500 Fax 02-6312-8959 [www.kpfis.or.kr](http://www.kpfis.or.kr)

